

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미국의
선택과 유사동맹간 딜레마에 관한 연구
- 2010년대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

2021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오 태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미국의
선택과 유사동맹간 딜레마에 관한 연구
- 2010년대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lemma between quasi alliances according
to U.S. Choic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alliance
-The Case Study of Korea-Japan in 2010's-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오 태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미국의
선택과 유사동맹간 딜레마에 관한 연구
- 2010년대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lemma between quasi alliances according
to U.S. Choic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alliance
-The Case Study of Korea-Japan in 2010's-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오 태 진

오태진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미국의
선택과 유사동맹간 딜레마에 관한 연구
- 2010년대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오 태 진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된 미국은 동북아의 국제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을 견제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국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소홀했던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중국의 팽창을 본격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후 미국은 국방비 축소 정책에 따라 기존의 방식대로 직접적인 군사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2010년대의 동북아는 중국의 팽창정책뿐 아니라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 또한 동북아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한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에 동시영향력을 갖추고자 군사력 강화를 통한 강대국화를 추진하였고, 북·미 관계 사이를 파고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 또한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활용한 중국 견제에 힘쓰며 군사력의 해외투사가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의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 지역으로의 해양력 확대였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미일동맹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면서 주로 해·공군력 위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대북문제나 기타 위협에 대해서는 강한 군사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근접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을 활용하였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협력과 그들의 안보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단순히 두 국가의 충돌이 아닌 사회주의 3국, 자유민주주의 3국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북·중·러 3국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한·일에 요구한 방법이 있으며 한·일이 미국에게 요구한 방법이 있다. 한·미·일의 공동 안보위협은 북·중·러 3국이었고, 이러한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호 협력을 통해 힘을 강화해야했다. 하지만 한·일 두 국가는 서로의 군사력 증강을 잠재적 위협으로 생각하였으며, 동맹 내부에서 서로의 군비증강이 안보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이 한·일 두 국가에 요구하거나 혹은 한·일이 미국에 요구하여 추진된 안보정책이 한·일 두 국가 사이에 딜레마를 발생하게 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딜레마가 발생했고, 두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알아보고 이러한 배경과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현실주의, 구성주의, 동북아안보, 중국의 부상, 유사동맹, 안보딜레마, 방기-연루 딜레마, 사드, 평화헌법, 미사일 지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현실주의의 발전	6
제 2 절 구성주의 이론	20
제 3 절 동맹과 딜레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제 4 절 소결론	28
제 3 장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국의 선택	30
제 1 절 한반도 주변국 안보정세	30
제 2 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43
제 3 절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의 對중국 전략	46
제 4 절 소결론	58
제 5 절 분석의 틀	52
제 4 장 유사동맹 간의 딜레마 사례	54
제 1 절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54
제 2 절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58
제 3 절 한국의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 개정	61
제 5 장 결 론	6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6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67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68
참 고 문 헌	69

표 목 차

[표 2-1]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과 동북아 국제체제 비교	9
[표 2-2]	왈츠의 세 가지 이미지	11
[표 2-3]	구조적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	12
[표 2-4]	왈츠와 미어샤이머의 국제체제에 대한 가정 비교	14
[표 2-5]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강대국의 패권 추구를 위한 운영목표	15
[표 2-6]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권력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16
[표 2-7]	국제적 무정부상태의 문화	22
[표 2-8]	왈트(Walt)의 동맹 지속요인, 쇠퇴요인 비교	26
[표 3-1]	북한 1~6차 핵실험 현황	30
[표 3-2]	2017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31
[표 3-3]	일본 안보법제의 각종 사태와 내용	41
[표 3-4]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2018년)	49
[표 3-5]	동북아 주요 6개국의 위협인식과 안보전략	51
[표 4-1]	사드(THAAD) 제원 및 특성	55
[표 4-2]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 경과	63

그 립 목 차

[그림 2-1] 오간스키의 위계적 국제질서 구조	19
[그림 3-1] 북한 미사일 사거리	32
[그림 3-2] 한·일간의 딜레마 발생 모형	53
[그림 4-1] 한국의 THAAD 배치와 한·일의 딜레마 발생 모형	57
[그림 4-2]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한·일의 딜레마 발생 모형	60
[그림 4-3] 한국이 개발 보유중인 미사일 현황	63
[그림 4-4]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한·일의 딜레마 발생 모형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미국과 소련의 두 축을 중심으로 힘겨루기를 하던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소련의 힘은 점차 사라졌고 동북아에는 미국 유일의 단극체제가 펼쳐졌다. 냉전의 종식 후 조용히 힘을 기르던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며 동북아 패권에 도전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며 일대일로 사업과 ‘중국몽(中國夢)’을 표방하며 팽창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중국이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것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에는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을 바탕으로 혼란이 시작되었다. 국경선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적절한 지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가 사이에 바다를 두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중동의 중앙조약기구(CENTO), 구(舊) 소련의 바르샤바조약기구(WTO) 등과 같은 집단방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특성은 힘을 가진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국제체제를 주도하게 된다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 형태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맞서 봉쇄정책으로 중국의 부상과 패권국 도전에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중국·러시아의 3국의 힘을 합쳐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의 동북아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에서의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국이자 한·미·일 동맹의 리더로서

2010년대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을 필두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북·중·러 동맹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한·일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고 안보를 강화해 온 국가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된 한·미 혹은 미·일 두 국가, 더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상호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일은 동맹국의 동맹국인 관계로 상호 미국을 상대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도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같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유사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질감을 느낄만한 국가이다. 하지만 동북아에서의 한·일 관계는 서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국가적 감정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 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속 적대적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 미국의 입장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두 축인 한·일 두 동맹국 사이의 적대적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게 일본은,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동맹국의 동맹국”인 관계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의 리더로서 중국의 부상과 팽창에 대비한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군사전략적 요구를 해왔으며, 대한민국과 일본 또한 “동맹의 취약성 감소”라는 명분으로 자국의 군비증강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전략적 요구는 한·미·일 동맹의 안보강화를 불러왔지만 한·일 양국이 연루(entrapment)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연루의 결과는 한국에게 안보 및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일본은 이러한 안보에 편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일의 군비증강 또한 결과적으로 동맹의 안보강화를 일으켰지만 한·일 양국 사이에서는 군비경쟁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했다. 본 연구는 한·미·일 동맹 내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북·중·러 3국의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싸우는 아군으로서 한·일 관계를 봐야 하는지 혹은 식민지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및 노역,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역사·문

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한 국가가 이익이 되면 한 국가는 손해를 보며, 상대의 군비증강을 자국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야할 적대 국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는 한·미·일 모두 동북아에서 가장 큰 국가위협을 북방삼각체 국가(북·중·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0년대 발생했던 주요 사건인 사드(THAAD)배치 문제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국가위협을 앞에 두고도 한·일 간의 관계는 더욱 적대적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곧 한·미·일 동맹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연히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동의 적 앞에서 한·일 양국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러 동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이 자신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했던 조치를 미국이 동맹국에게 요구한 바와 한·일 양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바로 구분하여 한·일 양국에 미친 결과를 알아보고, 더욱 공고한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한·일 관계에서 딜레마를 유발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2010년대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한·일간에 어떠한 딜레마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절충적 시각에서 미·중 갈등 속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분석하고 제시하여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동북아지역의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2010년대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이 북·중·러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직접적인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유사동맹 관계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전략과 동맹정책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이 펼치고자 하는 노력이 예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 상호간에 딜레마를 발생시킨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제사회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지만 한·일의 관계의 특수성이 더해져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믿음과 기대에 달려있다.”는 국가간의 관계를 중요시한 구성주의적 관점의 시각도 절충하여 현실주의 관점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

동북아의 패권국 미국이 중국의 성장과 팽창정책에 있어 어떠한 위협을 느꼈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미·중 대립에서 남방삼각체 국가(한·미·일)와 북방삼각체(북·중·러) 국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2010년대의 동북아 정세를 개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0년대에 동북아에 있었던 주요 사건에서 미국은 남방삼각체 국가의 리더로서 한·일 두 국가에게 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해 어떤 요구를 하였는지, 한·일 또한 미국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려 한다. 여기서 미국의 요구나 한·일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했다는 가정을 세우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주요 사건인 사드(THAAD)배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대한민국의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 개정 사례를 통해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 혹은 한·일의 요구가 동맹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한·일 두 국가 사이에서 어떠한 딜레마를 유발했는지 분석모형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는 스나이더(Glenn H. Snyder)의 방기-연루모델과 허츠(John Herz)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분석하여 한·일 사례에서 나타난 딜레마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미국이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동맹국(한·일)을 활용하는 결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한국과 일본이 겪게되는 딜레마를 종속변수로,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의 요구인지 한·일의 요구인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됨위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동맹의 형성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실주의 이론이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미-중 갈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주의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동북아만의 국제정치 특성을 설명하면서 지리적 근접성이 있으면서 비슷한 대외적 위협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동맹이 형성되지 않고 유사동맹 관계로 남아있는 한·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성주의 이론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한·일 양국이 겪는 딜레마의 종류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와 안보환경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동북아 상황에서 미-중의 패권경쟁과 중국의 팽창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다뤘다. 4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이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실제 수행한 전략적 행동이 유사동맹 관계인 한·일간에 어떠한 딜레마를 겪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한·일 양국에 어떠한 딜레마를 겪게 하였는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현실주의 이론

1. 현실주의의 발전

현실주의에서는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의 기본단위는 국가이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집권하며 각 국가를 통제하는 권위체가 없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무정부상태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힘(power)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이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이익 추구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이익추구에 대한 합리성을 가진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영토나 자원 등의 요소가 발생하거나 경쟁국가 사이에서 상호간의 마찰요소가 될 때, 힘이 사용되어지고 이러한 힘의 행사는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인 해결수단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군사력이다.¹⁾

이러한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악(惡)하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고, 국가가 외교활동을 하는 이유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가 있다. 한스 모겐소는 현실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치에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둘째, 국제정치는 권력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셋째, 이러한 권력을 사용한 이해관계는 의미가 고정불변하지 않고 정치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 성공적인 정치행위와 도덕성 사이에는 긴장감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중함이 곧 정치에서의 최고 선(善)이다. 다섯째 국가의 도덕적 열망을 보편적인 도덕적 목표라고 동일시하기를 거부한다. 여섯째, 정치영역은 다른 분야와 다른 독자성을 가지므로 합법성과 도덕성으로 따져서는 안된다.²⁾

1)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35.

7 모건소는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힘의 균형 상태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를 일반적 사회원리(General of Social Principle)라 하였고, 국내·외적 정치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냉전시대에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과 미·소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군비경쟁의 지속에서 입증되었다.³⁾

동북아 국제체제와 미·중의 갈등을 모건소의 원칙과 비교해보면 첫째, 미·중 두 국가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중은 물론이고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대결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협을 제거하고 취약성을 감소하고자 하려는 국가의 행위는 인간의 본성과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북·중·러의 협력과 같은 현상을 본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며, 당연하고 객관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유지를 통해 이해관계 즉, 국가이익을 추구하고자 하고 중국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힘을 사용하여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북아의 패권 차지와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려온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과 전통적으로 적대적 감정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2010년대에 들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도 이에 발을 맞추어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넷째,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중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국 또한 레이더를 통해 한국 등 주변국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한국의 사드 배치 또한 같은 논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⁴⁾ 다섯째, 패권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현 동북아 국제체제와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팽창정책을 국가이

2)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W. Thompson, 이호재·엄태암 옮김, 『국가간의 정치 1』, (파주 : 김영사, 2014), pp.83-108.

3) 윤정희,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는가? : 현실주의 시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pp.21-22.

4) “너무 나간 中 반한정서... 사드보복 중국의 오판과 모순”, 『연합뉴스』, 2017년 3월 16일

익을 위한 보편적 법칙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여섯째, 2020년 10월, 대만 영공에 미군의 군용기가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중국은 영공을 침범한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였다.⁵⁾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같은 자유진영 우방국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영공침범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국제정치에서 국제법이나 도덕적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자 영역의 문제라는 것이다. 모겐소가 주장한 현실주의 6원칙과 미·중 갈등속의 동북아 주요 국가간의 안보구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5) “美군용기 대만 날았나... 미국 “아니다” vs 중국 “추적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 25일

표 2-1]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과 동북아 국제체제 비교

구분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	동북아 국제체제
1	정치현상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에 지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북·중·러의 협력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 본성과 같은 객관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국가의 대외적 활동을 힘(power)의 관점에서 분석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패권을 통해 더욱 많은 국가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3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성이 있다.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적대적 관계였으나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일의 협력이 국가 안보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변화하였다.
4	정치행위는 도덕성-정치적 성공 사이의 긴장감이 존재한다. * 도덕적이라 해도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정치적 성공이라 해도 비도덕적인 경우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의 정치적 성공과 도덕성 사이에서의 갈등이 존재했다.
5	특정국의 도덕적 열망과 보편적 법칙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패권국인 미국 중심의 동북아 국제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팽창정책을 국가이익이라는 보편적 법칙으로 추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6	정치적 영역은 다른 영역과의 자율성을 가진다.	미군 비행기가 대만 영공을 비행한 사례에서 중국은 미수복 지역에 대한 영공침범으로 국제법 위반을 주장, 미국은 우방국 상공 비행으로 주장

* 출처 :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W. Thompson, 이호재·엄태암 옮김, 『국가간의 정치1』, (파주 : 김영사, 2014), pp.83-108.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 인용

전통적 현실주의는 미·중을 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립과 동북아 안보구조를 현실주의 6원칙을 통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정치현상을 권력(power)이라는 단일 요소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북방삼각체 국가와 남방삼각체 국가의 이념(ideology)적 갈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⁶⁾ 또한 모든 국가는 전통적 현실주의

6)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2015), p.51.

주장하는 원칙에 의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주장은 각 국가만의 특성에 따른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 현실주의 이후 왈츠(Kenneth N. Waltz)에 의해 고전적 현실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 국제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동일한 한가지의 요소 즉, 인간의 본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이나 국가의 행동을 설명할 때 인간과 국가가 처해진 상황, 즉 구조나 시스템을 봐야한다고 주장한다.⁷⁾ 발전한 현실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혹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라고도 한다. 왈츠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세 가지의 이미지로 분류하여 분석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떠한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가 지닌 내부적인 특성, 세 번째 이미지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다.⁸⁾ 첫 번째 이미지는 인간의 사악함과 부적절한 행동은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왈츠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이미지의 핵심은 개인의 선량함이 곧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⁹⁾ 왈츠는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 잘못 통제된 공격성, 어리석음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계몽과 사회 심리적 안정을 통해 전쟁이 근절된다고 보았다.¹⁰⁾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스피노자, 니버, 모겐소 등의 학자는 첫 번째 이미지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의 유용성을 연구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①인간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과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병폐가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 ②인간의 본성을 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 ③인간의 사악함을 억제하여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 ④인간 행위를 개선하여 평화를 이룩하려는 입장에 대한 연구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사회 및 정치적 구조와 연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사회·정치제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¹¹⁾ 두 번째 이미지는 국가의 내부적 결함이 국가 간의 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7)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파주 : 나남출판, 2007), p.133. 재인용

8)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p.29-30.

9)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39.

10) Kenneth N. Waltz, 『인간, 국가, 전쟁』, 정성훈 옮김, (파주 : 아카넷, 2015), p.37.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W. Thompson, 이호재·엄태암 옮김, 『국가간의 정치1』, (파주 : 김영사, 2014), pp.423-431.

11)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p.68-69.

다.¹²⁾ 국가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이지 않거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전쟁이라는 현상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지닌 내부적 특성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 前 미국대통령 월슨의 주장이었고,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은 소련 공산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주장했다.¹³⁾ 세 번째 이미지는 전쟁의 원인을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립이 전쟁을 방지하는 해법이라는 주장이다.¹⁴⁾ 하지만 왈츠가 말하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라는 의미가 혼란과 무질서, 극단적인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당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도 하며 혼란과 무질서라는 것이 반드시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¹⁵⁾

[표 2-2] 왈츠의 세 가지 이미지

구분	전쟁의 원인	주창자
첫 번째 이미지	인간 본성	홉스, 스피노자, 모겐소
두 번째 이미지	국내체제	칸트, 월슨, 레닌
세 번째 이미지	국제적 무정부성	투키디데스, 루소

* 출처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29.

왈츠는 체제의 구조를 정의하는 3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직 원리(ordering principles)이다. 이는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이며 중앙에서 권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해 감독하는 이가 없어 자력구제(Self-Help)의 원칙이 적용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최고의 관심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¹⁶⁾ 또한 국가 간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실질적 협력이란 존재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

1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83.

13)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29.

14) Kenneth N. Waltz, 『인간, 국가, 전쟁』, 정성훈 옮김, (파주 : 아카넷, 2015), pp.312-.

15)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p.33-34.

16)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2015), pp.101-102. 재인용

14) 협력을 통해 확실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확실한 전체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국가가 협력에서 이탈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탈하여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¹⁷⁾

둘째, 기능의 분화(division of Functions)이다. 모든 국가는 상대적인 능력에서만 차이만 있을 뿐 국가별 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안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의 분화는 첫 번째 요소였던 조직 원리에 따라 체제의 구조가 위계적이면 기능의 분화가 발생하고, 체제의 구조가 무정부상태라면 기능의 분화가 발생하지 않는 변수라는 것이다. 셋째, 능력의 배분(distribution of capability)이다.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얻기 위해 결합된 능력(combined capabilities)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합된 능력이란 경제·군사·외교력 등 국력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고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인 권력능력의 배분에 의해서만 국제체제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배분상태는 강대국의 수를 기준으로 단극·양극·다극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란 시장에 놓여있는 회사와 같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이익을 얻기 위해, 즉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제체제의 구조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해준다고 왈츠는 주장했다.¹⁸⁾

[표 2-3] 구조적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

체제	차원	요소	특징	비고
국제체제	체제차원	무정부성	세계정부의 부재 (중양권위체 없음)	상수
	구조차원	상대적 힘의 배분 강대국의 숫자(극성)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 일극체제 다극체제	변수
	단위차원	상대적 힘을 가진 국가	생존과 안보의 추구 자조(행동원칙)	상수 (변수)

* 출처 : 윤정희,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는가? : 현실주의 시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3), p.26. 재인용

17) 박재영, 위의 책, pp.90-91.

18) 박재영, 앞의 책, pp.101-104.

13전통적 현실주의의 모겐소는 국가 간의 세력균형과 이를 위한 정책은 안정화를 위한 요소라고 보지만 왈츠는 세력균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세력균형은 참여국의 수에 따라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한 다극체제 보다는 양극체제가 전쟁의 빈도가 낮다고 본다. 이렇게 왈츠는 국가 간의 행위를 균형행위라고 보았는데 현재의 동북아 패권국은 미국이지만 곧 다른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¹⁹⁾

동북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미국 등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 밀집되어있는 형태이다. 이는 유독 동북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며 왈츠의 이론에 의해 분석하자면 자력구제의 원칙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무장을 한 결과 인접국으로 하여금 안보딜레마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국가들이 안보딜레마에 의해 안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무정부성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로 형성되었던 동북아 국제사회에 비해 중국의 부상 이후 미·중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왈츠 이론의 장점은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의 가치관이 어떠한지와 국내정치의 역학관계,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지에 관한 것보다는 모든 국가들은 합리적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세력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간결함에 있다.²⁰⁾ 그리고 동북아 각 국가들의 경쟁과 대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동북아의 안보구조는 다수의 강대국과 중진국인 대한민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미·중의 갈등 양극화로 보이지만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일본,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²¹⁾ 또한 미국의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나 일본 등의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의 안보에 편승하고 있으며 중국

19)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파주 : 나남출판, 2007), pp.135-136.

20) 양준희, “왈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3)호(2001), p.28.

21) 강주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7), p.10

뿐만이 유일하게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왈츠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한계를 가진다.²²⁾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 국가는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한 힘을 원하게 되고, 상대와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국가 혹은 세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대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국가는 자멸하거나 이러한 국가에게 주변국이 균형을 위한 보복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미어샤이머(John J. Miersheimer)는 이러한 현상유지 편견을 거부하면서 국가는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²³⁾ 또한 왈츠의 구조적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상태를 항상 위협하지는 않고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에서는 미어샤이머의 다섯 가지 가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정부상태가 위험하다고 보았다.²⁴⁾ 미어샤이머의 다섯 가지 가정을 왈츠의 가정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왈츠와 미어샤이머의 국제체제에 대한 가정 비교

구분	왈츠의 가정	미어샤이머의 가정
1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다.	
2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3	.	강대국은 어느 정도의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한다.
4		상대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5		국가는 합리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행동한다.

* 출처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80. 미어샤이머의 다섯 개의 가정 인용

위와 같은 미어샤이머의 가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국가는 최상위 권위체이기 때문에 위협에 빠지면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두

22) 이준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파주 : 나남출판, 2007), pp.133-136.

23)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2015), pp.164-165.

24)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79.

번째,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가는 자력구제의 원칙에 의해 서로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모든 국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패권을 추구한다.²⁵⁾ 그렇게 지역 패권국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의 패권국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세력균형을 통해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현상유지 국가가 된다.²⁶⁾

미어샤이머는 강대국이 패권을 가지기 위한 4가지의 세부적 운영목표(operational goals)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2-5]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강대국의 패권 추구를 위한 운영목표

	운영목표 (operation goals)	내 용
1	지역적 패권(regional hegemon) 추구	해양의 영향으로 전지구적 패권국은 불가, 지역 패권국이 된 후 세력균형을 통한 현상유지 추구
2	최대한의 부(maximum wealth) 추구	군사적인 우위 달성이 가능, 부를 창출하는 지역을 지배하거나 상대가 지배하는 것을 저지
3	현저한 지상병력(preeminent land power) 추구	영토를 점령하고 통제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써의 지상군
4	핵의 우월성(nuclear superiority) 추구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가능으로 핵공격 위험이 작아도 타국의 위협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

* 출처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2015), pp.166-168. 재인용

강대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패권국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국가와 동맹을 맺고 패권에 도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른 지역의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지역 패권국은 역외 균형자로서 잠재적 패권국(potential

25) 이근욱, 앞의 책, pp.80-81.

26)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2015), p.167.

hegemon) 지역의 인접국을 통해 잠재적 패권국을 견제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전가 전략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균형화에 참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패권국이 있는 지역에서 2개 이상의 강대국이 함께 존재한다면 지역 패권국 입장에서는 별도의 노력 없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동북아 국가로 예를 들자면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은 지역 패권국인 미국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과 또 다른 강대국인 일본이나 러시아의 존재로 인해 서로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패권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²⁷⁾ 따라서 미어샤이머는 국가의 권력을 극대화하여 패권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택의 요인에 대한 가설도 제시하고 있다.²⁸⁾

[표 2-6]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권력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권력을 증가하기 위한 전략	억제하기 위한 전략
전쟁 전략 : 전쟁을 통해 경쟁국을 물리나게 함	균형화 전략
공갈협박 전략 : 위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냄	
피를 흘리도록 하는 전략 : 두 경쟁국을 장기적, 고비용 소모전으로 유인, 유인국은 상대적 권력의 증가	책임전가 전략
유혈 전략 : 이미 존재하는 경쟁국들의 갈등을 장기적, 고비용 소모전으로 가도록 유도	

* 출처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2015), pp.169-172. 재인용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동북아 안보구조를 바라보면 미·중의 경쟁은 패권국과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 간의 어쩔 수 없는 갈등이기 때문에 미·중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강대국은 그 지역에서의 최강의 국가 즉, 패권국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²⁹⁾ 앞서 언급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으로 주장했던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존이기 때문에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미·중의 갈등사이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27) 박재영, 앞의 책, pp.170-171, 재인용

28) 이근욱, 앞의 책, p.168.

29) John J. Mearsheimer,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105, No.69(2006), p.160.

행위로서 남·북방삼각제 공고화에 기여하였고, 동북아의 양극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국가는 국제체제의 기본 행위자이고 국가는 곧 국제체제의 기본 단위이다.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며 국가는 힘을 증대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국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타국과 동맹을 맺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전리품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세력균형 이론의 핵심은 동맹으로 하여금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세력균형 이론에서의 국제정치의 원칙이며 특정한 패권국이 없는 상태가 바로 바람직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만약 특정 국가가 패권을 가지기 위해 위협을 한다면 반대 세력들이 동맹을 형성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본다.³⁰⁾ 특정 국가가 패권을 가지기 위해 위협하는 경우를 근대 한반도의 사례에서 찾아본다면 19세기까지 한국은 중국을 황제의 나라로 받들고 제후국으로서 조공을 바쳤지만 1894~1895년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은 일본이 주장했다. 이후 러시아의 도전을 받고 1896년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러일전쟁이 일어났으며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을 가지고 태평양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행사했다. 이후 미국이 일본의 자리를 이어받아 소련의 도전을 견제하는 국가로 서게 되었다. 세력균형론에서는 국제사회가 다양성과 적대감이 존재하며 국가의 권력욕은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분쟁의 모습은 “직접대결”과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³¹⁾ 여기서 A와 B라는 두 국가 혹은 진영이 있다고 가정하고 A와 B의 힘이 비슷하면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힘의 차이가 보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여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³²⁾

하지만 세력균형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상호 적

30) 최성근, “세력전이 이론을 통한 강대국 간의 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pp.7-8.

31)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W. Thompson, 이호재·엄태암 옮김, 『국가간의 정치 1』, (파주 : 김영사, 2014), pp.423-431.

32)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파주 : 나남출판, 2007), p.116.

대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벌어지는 감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말한 삼위일체(三位一體)적 전쟁의 본질요소인 이성, 감성(폭력성), 불확실성 중 감성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더 강하다고 느끼거나 약하다 생각해도 전쟁을 통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³³⁾ 또한 세력균형론에서 말하는 동맹의 개념은 100의 힘(power)을 가지고 있는 A국가와 70의 힘을 가지고 있는 B국가 사이에서 30의 힘을 가지고 있는 C국이 B국과 연합하여 A를 견제하고 이렇게 B국과 C국의 연합하려는 행동을 균형(balancing)의 행동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동맹의 형태는 C국이 A국에게 편승하여 자국의 안보를 보장 받는다 주장했고 이를 편승하기(bandwagon) 전략이라 했다.³⁴⁾ 이를 동북아의 모습에서 대입해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A국은 미국, B국을 중국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선택은 중국을 선택하여 균형의 행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을 선택하여 미국의 안보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3.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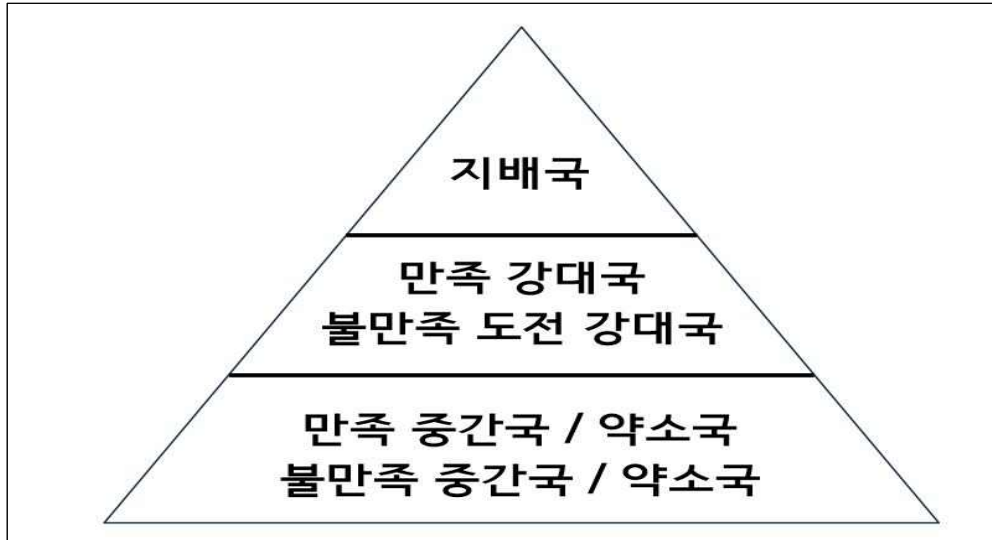
세력전이 이론에서는 특정국이나 특정 세력이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오간스키(A.F.K Organski)는 세력전이 이론의 가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력의 전환은 잠재적 힘의 단계, 과도기적 성장단계, 힘의 성숙단계로 3단계를 거친다. 둘째, 각 국가는 지배국, 강대국, 중간국, 약소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셋째, 국가는 현존체제에 만족하는 국가와 불만족하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³⁵⁾

33) 이춘근, 위의 책, pp.43-44.

34) 이춘근, 앞의 책, pp.140-141.

35) 이상환, “세계 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 : 세력전이 시각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 18집 (1)호(2015), p.4. 재인용

【도표 2-1】 오간스키의 위계적 국제질서 구조



* 출처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257. 인용

오간스키는 특히 패권국 중심의 체제에 만족을 느끼는지 불만을 느끼는지에 주목하였는데 불만을 느낀 국가가 성장하여 그 힘이 패권국을 따라잡을 때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³⁶⁾ 또한 국제체제를 위계질서로 보고 지배적 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패권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불만족 국가는 현상을 바꾸길 희망하기 때문에 불만족 국가가 현상유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불만족 국가는 현상을 타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것이 세력전이 이론의 중요 가설이다. 하지만 불만족 국가와 패권국(혹은 지배적 세력)이 동등한 지위가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지만 패권국과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다른 강대국이 동등한 지위가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강대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세력이 되더라도 기존의 현상을 조금 변경하거나 유지함으로써 기존 패권국의 이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³⁷⁾ 이처럼 가장

36) 이지원, “중국과 일본간의 영토분쟁 격화원인 연구 : A.F.K. Organski의 세력전이론을 바탕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 심화요인 분석”, 「아시아연구」 제 18집 (2)호(2015), p.37.

37) Douglas Lemke, “Great Powers in the Post-Cold War World : A Power Transition Theory Perspective”, Conference papers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2002), p.8.

20한국가, 즉 패권국이 국제체제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는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지당하며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렘키(Douglas Lemke)는 이것을 국제체제의 공식적이면서 비공식적인 룰(formal and informal rules)이라고 주장했다.³⁸⁾

세력전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의 대립은 패권국인 미국에 의해 형성된 국제체제에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는 동맹국인 일본에게는 당연히 국가이익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 중심의 질서는 불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신장했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북아 동맹국인 일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일 영토분쟁의 사례인데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영유권 주장 문제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영토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미일동맹에 대한 도전이면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힘이 미일동맹의 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현 미국 중심의 현상 불만족 국가의 대표 중국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다.³⁹⁾

제 2 절 구성주의 이론

1. 웬트(Alexander Wendt)의 구성주의 이론

물질적 세계는 인간의 관념 밖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⁴⁰⁾ 국제정

38) Douglas Lemke, 앞의 논문, pp.6-7.

39) 이지원, “중국과 일본간의 영토분쟁 격화원인 연구 : A.F.K. Organski의 세력전이론을 바탕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 심화요인 분석”, 「아시아연구」 제 18집 (2)호(2015), pp.50-55. 재인용

40) 정재환, “사회적 합리성의 다양성 : 합리성에 대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 「평화연구」 제 23집 (1)호(2015), p.414. 재인용

치 현상이 국가 간의 힘의 분배 상태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자-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의 현실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⁴¹⁾

웬트는 국제체제를 움직이는 것은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힘(power)의 논리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이익(interest)도 아닌 정당성(legitimacy)이라 하였다. 정당성은 상호간 공유된 규범과 이념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⁴²⁾ 예를 들어 한 사회 내에서 행위자들이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위반에서 오는 비난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배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국제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⁴³⁾

웬트는 왈츠(Waltz)가 주장했던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는 독자적 행위자이며 모든 국가는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였다.⁴⁴⁾ 웬트는 무정부상태에 대해 “국가하기 나름(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이라 주장하며 홉스적, 칸트적, 로크적 논리의 질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이 아닌 정체성(identities)의 배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⁴⁵⁾ 홉스적 무정부상태는 자신을 제외한 타 행위자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칸트적 무정부상태는 타 행위자를 친구로 간주하며 로크적 무정부상태에서는 자신과 타 행위자 모두 살아야 하는 경쟁자로 간주하는 것이다.⁴⁶⁾ 무정부상태 속 충돌이 최초에는 홉스적 무정부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이후에는 국가 상

41) 김관욱,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대결의 구성주의적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 17집 (1)호(2014), p.121. 재인용

42) 양기웅, “한일관계와 역사갈등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연구」 제 17집 (2)호(2014), p.177.

43) 박정원,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법 : 자결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 126집 (3)호(2012), p.51. 재인용

44)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241.

45) 박정원,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법 : 자결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 126집 (3)호(2012), p.50. 재인용

46) 양준희 “왈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3)호(2001), pp.44-45.

222간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로크나 칸트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표 2-7]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문화

구분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상대와의 관계	국제관계
홉스적 문화	적	적대감	죽느냐 죽이느냐
칸트적 문화	친구	우정	영구 평화
로크적 문화	경쟁자	경쟁	공존 공생

* 출처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251. 재인용

구성주의 이론에서의 국가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대중이 믿고 공유하는 주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곧 대중의 믿음과 주관의 변화로 볼 수 있다.⁴⁸⁾ 그리고 국가의 대외적 행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정체성을 구성하여 국익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설정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⁴⁹⁾ 대표적인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은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가 아니었지만 일본이라는 동일한 적을 통해 동일한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 한다는 공통된 국익을 위해 이해관계가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미·중·일 관계는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차이가 생기고 미·중은 적으로서 대결하게 되었다.⁵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맹국과 같이 우호적인 관계라면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적대국이라면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위협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주의에서는 국내·국제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국가의 자아를 분석하여 국가의 행동과 국제정치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⁵¹⁾

47) 양준희 위의 논문, p.37. 재인용

48) 최경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 투영된 과거, 블랙박스 처리된 현재, 추정된 미래”, 「국제정치연구」 제 21집 (1)호(2018), p.90. 재인용

49) 김관욱,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대결의 구성주의적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 17집 (1)호(2014), p.122. 재인용

50) 김관욱, 위의 논문, p.122.

51)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p.243-247.

제 3 절 동맹과 딜레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동맹이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맹(alliance)이란 방위조약의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그밖에도 중립조약(neutrality pact),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 협상(entente), 제휴(coalition) 등도 동맹의 범주에 속한다. 통상 동맹은 방위조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방위조약과 제휴이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방위조약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NATO를 들 수 있다.⁵²⁾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맹의 축은 바로 한·일 관계이다. 하지만 두 국가는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북방삼각체 국가들 보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방삼각체 국가들로부터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의 안보상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각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안보상의 이해관계도 일치하여 양국은 우호적 관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동맹의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⁵³⁾ 하지만 두 국가는 동맹관계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트(Stephen M. Walt)는 국가는 동맹을 맺는 이유는 동맹국의 군사력을 자국의 군사력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⁵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뿌리 깊은 역사적 적대감과 심리적 장벽이 한·일 관계에서 동맹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⁵⁵⁾

제휴란 일시적인 동맹의 형성이다. 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며 제휴를 의지의 동맹(alliance of willing) 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특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하게 된다. 다국적군 활동이 이러한 제휴 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⁵⁶⁾

52)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207.

53) Victor. D. Cha, 『적대적 제휴』,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p.20.

54) 나승학,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 76호(2015), p.163.

55) Victor. D. Cha, 『적대적 제휴』,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p.44.

24유사동맹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 3국을 공동으로 동맹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⁵⁷⁾ 유사동맹 모델은 공식적 동맹조약보다는 제휴(allignment) 관계에 초점을 둔다. 한·일 두 국가는 서로 적대적이지만 동맹을 맺고 있는 강대국에게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접근하고 불안이 줄어들 때 다시 서로 적대적이 된다는 것이다.⁵⁸⁾ 미어샤이머는 동맹(alliance) 역시 매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단언한다. 공통의 적 또는 외부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유 군사력을 통합하고 동맹을 체결한다. 즉, 동맹은 공통의 적과 외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며, 필요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도구이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동맹은 상속과 같은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법률혼이 아니다.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는 동거와 같다. 필요한 경우에 동맹은 체결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쉽게 해체된다. 동맹은 국가정책의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이익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이익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이 아니더라도 지원한다. 즉, 동맹은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이익은 상정하지 않는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가 팔머스톤(Lord Palmerston)의 주장과 같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permanent interests)만이 존재한다.”⁵⁹⁾

공고한 동맹이 되기 위해선 4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동질성의 원칙(principle of homogeneity)이다. 동질성이란 이념, 가치, 문화의 동질성을 의미하며 동맹국간 동질성이 클수록 더욱 공고한 동맹이 이어진다. 둘째, 호혜의 원칙(mutual benefit)이다. 동맹을 통해 상호간 비슷한 이익을 제공한다면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셋째, 균등 세력의 원칙(equal power)이다. 동맹을 체결했다고 해서 전시에 반드시 발효하지 않는다. 강대국은 유사시 약소국에 대한 배신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맹의 공고화를 위해선 약소국이 군사기지를 제공하거나 희소자원의 제공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동맹국의 원조 의무(casus foederis) 규정이다. 통상 동맹을 체결하면서 동맹국이 침공을 받을 시 자동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말한다. 여기서 원조 의무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동맹의 공고함이 결정된다.⁶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포함하는 모든 대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으

56)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35.

57) Victor. D. Cha, 위의 책, p.69.

58) Victor. D. Cha, 위의 책, p.24.

59)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pp.88-89.

으로서 미국이 안보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줌으로서 자율성을 양보하는 교환을 하게 되고 이로써 대미동맹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확장억제에서 보듯이 유사시에 미국이 필요한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에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거나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고 이러한 교환관계가 서로 호혜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⁶¹⁾

월트는 동맹이론에서 동맹의 쇠퇴요인 3가지와 지속요인 5가지로 구분하여 주장하였는데 먼저 쇠퇴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 인식의 변화요인이다. 동맹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기존 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쇠퇴하게 된다. 즉, 동맹 형성 시 설정했던 목표의 달성이나 공동의 위협이 약화되어 더 이상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둘째, 신뢰성 감소요인이다. 동맹은 서로의 안보를 위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동맹을 제고하게 된다. 이럴 경우 위협이 지속되고 동맹국이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동맹이 쇠퇴 혹은 붕괴하며 동맹 상대국이 안보지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면 동맹은 약화 또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내정치 요인이다. 국내정치에 동맹파기가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 위협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장기적 동맹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²⁾

동맹의 지속요인으로서는 첫째, 강력한 패권적 리더십의 존재여부이다. 동맹의 유지를 위해 파기하거나 이탈하려는 국가를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맹의 리더는 동맹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물질적 원조나 비용부담의 불균형을 감수하거나 불복하는 정권을 위협하여 동맹을 유지한다. 동맹 내부의 강대국이 패권국의 영향력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설득으로 동맹이 지속된다. 둘째, 신뢰성 보존 요인이다. 동맹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은 동맹을 해체하면 기존의 다른 동맹에게서 국가로서 신뢰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동맹국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동맹을 포기하는 경향이

60)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p.210-211. 재인용.

61) 박휘락, “사드배치 문제의 군사전략적 함의” 『통일전략』 제 16집 (4)호(2016), p.82.

62) 나승학,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 76회(2015), p.164 재인용

왔기 때문에 여러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하나의 동맹도 포기하기가 힘든 것이다. 셋째, 국내정치와 엘리트에 의한 조작 요인이다. 동맹에는 이익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에 국가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익단체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동맹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넷째, 제도화의 영향 요인이다.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위협의 변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제도화는 무기수입, 군사계획, 위기관리 등 동맹과 관련한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와 동맹국들이 집단적 결정을 하는 공식/비공식 규정의 존재이다. 다섯째, 동맹 참여국들의 이념적 결속 요인이다. 동맹을 맺고 있는 두 국가가 공통된 정치적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면 동맹은 지속된다고 본다. 이념적 결속은 곧 내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유사한 목적을 위한 공약은 동맹의 근본적 이유가 사라져도 동맹의 유지에 기여한다.⁶³⁾

[표2-8] 월트(Walt)의 동맹의 지속요인, 쇠퇴요인 비교

동맹의 쇠퇴요인	동맹의 지속요인
위협 인식의 변화	동맹국의 강력한 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신뢰성 감소	국내정치와 엘리트에 의한 조작
	제도화의 영향
국내정치 요인	동맹 참여국들의 이념적 결속

* 출처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217-219. 재인용

2. 동맹의 딜레마

1950년대 허츠(John Herz)에 의해 처음 정리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는 월츠가 강조했던 자력구제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힘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그 의도가 방어적 목적이라 해도 이것이 타국의 불안을 증대하고 이를 잠재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타국의 공격과 방어적 의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상대국의 평화적 의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⁶⁴⁾ 이러한 안보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로 한·미

63)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p.218-219. 재인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이를 북침용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⁶⁵⁾ 또한 한·미·일 동맹에서 유사동맹 관계인 한·일이 같은 이념과 비슷한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군비증강에 경계하고 비난하는 모습 또한 동북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보딜레마이다. 이렇게 발생한 안보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이나 일본 한 국가가 상대방이 역전할 수 없는 정도의 절대적 군사우위를 점해 완벽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시 상대의 군비증강을 유발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불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전쟁 상대로서 바라봤던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상대국을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⁶⁶⁾

국력이 비슷한 국가 간의 동맹을 국력결집 동맹(capability aggregation)이라고 하고, 비슷하지 않은 국가 간의 동맹을 자율성-안보교환(autonomy -security trade-off) 동맹이라 한다. 흔히 말하는 비대칭적 동맹이 바로 자율성-안보교환을 의미한다.⁶⁷⁾ 강대국은 군사원조와 무기·기술의 이전을 제공하거나 군대의 주둔으로 안전보장이나 안보 공약을 실현하기도 한다. 또한 적으로부터 침략상황 발생 시 이를 격퇴해주기도 한다.⁶⁸⁾ 여기서 강대국은 동맹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 하고 약소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책을 투영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낸다. 약소국은 앞서 말한 강대국의 군사원조나 무기·기술의 이전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강대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약소국은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하고 강대국의 원하는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강대국이 원한다면 군사기지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안보지원을 해주는 대신 자국의 정책결정에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를 자율성의 갈등(conflict of autonomy)이라 하고 곧 약소국이 가지는 딜레마이다.⁶⁹⁾ 한국의 사드(THAAD)배치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한국은 눈치만 보기 바

64) 최정우, “국가안보와 존재론적 안보 : 현실주의 안보론과 구성주의 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0.

65) 김광린,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학논총』 제 6집 (1)호(2016), p.109.

66) 김광린, 위의 논문, pp.110-111.

67)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219. 재인용

68) 김열수, 위의 책, p.220.

69) 김열수, 위의 책, P.221. 재인용

했던 사례에서 대표적인 자율성 교환의 딜레마를 볼 수 있었다.

스나이더(Glenn H. Snyder)의 방기-연루 딜레마에서 방기(abandonment)란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이 파트너를 배반하여 자신만의 안보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루(entrapment)란 자신의 안보이익과는 관계가 없지만 동맹 파트너의 안보이익을 위한 행동이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휘말려 들어가거나 군사원조를 제공하게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⁷⁰⁾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상대적 약소국이다.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연루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연루되는 현상은 연루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연루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연루되는 현상은 국력의 낭비와 외교적 손실의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에 있어 약소국의 방기-연루 딜레마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⁷¹⁾

제 4 절 소결론

전통적 현실주의에서는 권력(power)이라는 단일요소를 통한 모겐소의 6원칙을 적용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각 국가 간의 대립이 아닌 이념(ideology)으로 결합한 한·미·일의 남방삼각체 국가와 북·중·러의 북방삼각체 국가의 갈등으로 동맹 대 동맹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와 그 안에서의 각 국가 간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선 처해진 상황과 구조를 봐야한다는 구조적 현실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왈츠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동북아의 각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을 설명하기에 유용하지만 미·중의 구조적 갈등 속에서 강대국인 러시아와 일본의 개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등장한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최종 목표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중국과 같은 잠재적 패권국(potential hegemon) 지역의

70) 서정경,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 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세아』 제 15집 (1)호(2008), p.96.

71)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p.223-224.

일본과 같은 인접국을 통해 잠재적 패권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 전략이 불가능할 경우 균형화에 참가하는 것이다. 동북아 국제체제는 단순히 미·중의 대립이 아니다. 자국의 생존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이념적으로 구분된 남방삼각체 국가와 북방삼각체의 어느 한 세력을 선택하여 두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내부적 단결이 공고해지게 하고 이것이 곧 동북아의 양극화에 기여한 것이다. 이를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국제체제는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패권국인 미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과 협력하여 비슷한 세력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곧 평화를 구축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동북아의 모습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편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세력전이 이론에서 보면 중국은 패권국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는 동맹국인 일본에게는 당연히 국가이익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소련과 중국에게는 이것이 불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힘이 미일동맹의 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중국은 미일동맹을 상대할 힘을 기르기 위해 북·중·러와의 협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안보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한·일의 관계는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국제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이념적 동질성이 있는 패권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은 그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적대적이었으며 이러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가 보유한 군사력을 위협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제 3 장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국의 선택

제 1 절 한반도 주변국 안보정세

1. 북한

북한은 미국을 6.25 전쟁에서 자신들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게 한 전쟁 개입국인 동시에 남한과의 동맹국으로서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핵개발, 미사일 개발 등이 미국의 국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대북 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⁷²⁾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2012년 2월 29일 미국의 대북지원 조건으로 장거리미사일, 우라늄 농축에 대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2.29 미북 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 지속과 능력의 고도화를 이루었다.⁷³⁾

[표 3-1] 북한 1~6차 핵실험 현황

차수(실험 날짜)	실험지역	지진파 규모	폭발 위력(kt)
1차('06.10.9.)	함북 길주군 풍계리	3.9	0.8
2차('09.5.25.)	함북 길주군 풍계리	4.5	3~4
3차('13.2.12.)	함북 길주군 풍계리	4.9	6~7
4차('16.1.6.)	함북 길주군 풍계리	4.8	6
5차('16.9.9.)	함북 길주군 풍계리	5.0	10
6차('17.9.3.)	함북 길주군 풍계리	5.7	50(추정)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ldat1219/221804322309> 송영길 의원 요구자료 (검색일 : 2020.11.28.)

북·미 관계가 가장 악화되었을 시기는 2017-2018년 초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72) 김재환·박영택, 『동북아안보복합체와 한반도 안보』,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19), p.156.

73)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8.

체제와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략폭격기 실전훈련, 북한을 후원한다고 추정되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였다.⁷⁴⁾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규정하고 대북제재에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중국은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6.25 전쟁으로 맺어진 북·중 혈맹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전망이 있었다.⁷⁵⁾

[표 3-2] 2017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날짜	발사체	수량	발사 장소
2017	2.12. 신형 고체추진 탄도미사일(북극성-2)	1	평북 구성 인근
	3.6. 스커드-ER	4	평북 동창리 인근
	3.22. 불상	1	강원 원산 인근
	4.5. 불상	1	함남 신포 인근
	4.16. 불상	1	함남 신포 인근
	4.29. 불상	1	평남 북창 인근
	5.14.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	1	평북 구성 인근
	5.21. 신형 고체추진 탄도미사일(북극성-2)	1	평남 북창 인근
	5.29. 스커드 계열 개량형	1	강원 원산 인근
	7.4. 신형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14)	1	평북 구성 인근
	7.28. 신형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14)	1	자강 무평리 인근
	8.26. 불상(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3	강원 깃대령 인근
	8.29.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	1	평양 순안공항 인근
	9.15.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	1	평양 순안공항 인근
	11.29. 신형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15)	1	평남 평성 인근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ldat1219/221804322309> 송영길 의원 요구자료 (검색일 : 2020.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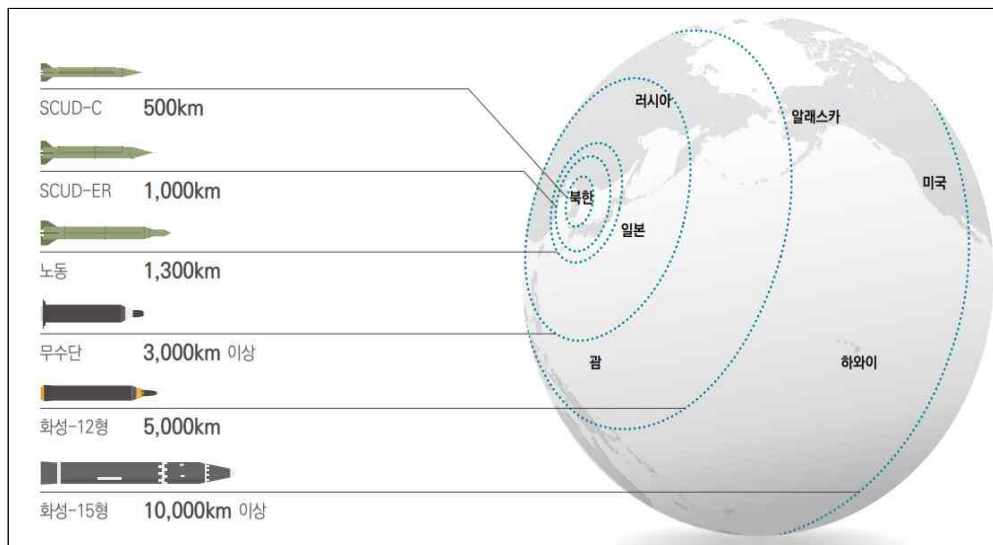
이에 북한은 8월 “괘 타격계획”을 발표하고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을 11월에 발사하였다. 이후 2018년 3월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하고 4월 핵·ICBM 발사중지 모라토리엄 선언과 5월 외

74) 김재환·박영택, 『동북아안보복합체와 한반도 안보』,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19), p.158.

75) 김재환·박영택, 위의 책, p.162.

32) 기자단을 초청하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송환 등에 합의하고 7월에 미군 유해 송환과 함께 동창리 엔진 시험장 시설을 일부 해체하였다. 이렇게 2018년 북핵문제가 대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자 일본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의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자 했다.⁷⁶⁾ 중국과도 2018년 북·중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⁷⁷⁾

[그림 3-1] 북한 미사일 사거리



*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26.

2. 중국

중국은 2010년 명목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다. 2014년 이후에는 미국을 제치고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부상한 이유는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지리학적인 위치가 크게 기여했는데 주변 동아

76)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20.

77) 대한민국 국방부, 위의 책, pp.20-21.

33) 국가들의 안행형(雁行型) 국제 분업과 중국계 이주민 자본이 중국 동남부 연안에 집중투자 되는 것 등이 초기 단계에서 큰 역할을 했다.⁷⁸⁾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의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려는 야욕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또한 2004년 일본은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첨단기술은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Robert A. Mundell)은 2060년에는 중국의 GDP가 EU를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⁷⁹⁾

냉전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로 흘러가던 동북아의 패권은 중국의 부상 이후 새로운 측면을 맞이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몽 실현을 위해 과거 중국의 전략노선이었던 도광양희(韜光養晦)-유소작위(有所作爲)-대국굴기(大國崛起) 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⁸⁰⁾

중국은 신 국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구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방문 시 최초 제시하였고 같은 해 11월 중공당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의 배경이 공동발전 촉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win-win)전략이라 밝혔지만 이는 중국 내에서의 과잉생산에 대한 해결책인 동시에 전략 중심의 확장과 국가안보 강화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평가된다.⁸¹⁾

2010년 중국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일대에서 일본과의 충돌 후 이를 근거로 공세적 대외전략으로 전환하여 해양이익(maritime interest) 개념을 도입하였다.⁸²⁾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에서는 2013년 조어도 지역을 포함하

78) 이재현,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진보평론』 제 81호(2019), pp.196-202.

79) 최영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pp.63-65.

80) 강주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pp.26-30.

81)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6), pp.58-67.

82) 강주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pp.30-31.

83)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하고 2015년 이후 이 주변에 무장순찰선과 함정의 활동이 증가하는 등 중·일의 긴장상태가 높아졌다.⁸³⁾

2013년 이후 약 2년간 중국은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수비 산호초 등 7개 산호초를 대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매립하여 면적을 확장 후 대형기 계와 부두, 건물, 비행장 등을 지었다. 이는 중국 외교부에서도 인정하였고 이는 민사적 요구에 의한 건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7월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실병 대항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미·일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군은 비접촉 승리를 상정하고 전략적 중심의 확대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근해(近海)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추구하고 있다.⁸⁴⁾ 남중국해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의 중심지이다. 특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천만 배럴에 달한다. 따라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요지역이고 중국의 수입에너지 중 80%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로 들어온다. 또한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또한 풍부하여 남중국해를 핵심이익(core interest)이 걸려있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 회귀정책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뜻을 밝혔다.⁸⁵⁾

2015년 중국은 역지능력의 강화를 위해 중국적 군사전략인 “신형세 적극방어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중국은 주로 군사전략방침 이라는 군사역량 건설이나 행동준칙, 총 방침에 대한 내용만을 제시 해왔는데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정세, 적극방어의 전략방침, 군사역량건설발전, 군대사명과 전략임무, 군사투쟁준비, 군사안보협력의 6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군사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군대사명과 전략임무는 18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 확정된 중국몽(中國夢)과 2개 백년목표라는 전략목표에 근거한다. 여기서 국가안전과 발전

83) 배병화,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동북아 지역안보”, 「한국군사학논집」 제 75집 (3)호(2019), p.10. 재인용

84)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6), pp.69-71.

85) 변창구,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중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 (69)호(2013), pp.7-8. 재인용

이익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해상 군사역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과 최저 수준의 핵 역량을 유지하면서 전략조기경보, 지휘통제, 미사일방어 돌파, 신속 반응 및 생존방호 능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쟁의 방향이 주로 해상전이라는 바를 시사했으며 미국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한 조건을 비대칭 전력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군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평화 안정 환경조성, 군사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 국제적 이미지 쇄신과 강대국 이미지 부각, 전방위적 차원의 군사력 건설 기여를 위해 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⁸⁶⁾

이러한 중국의 해양력 강화는 기존 “근해 방어형”에서 “근해방어와 원양호위”로의 변화와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간척을 통해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변화를 가져왔다.⁸⁷⁾ 중국은 남중국해에 “9단선”을 사용하여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에 있어 권리를 주장하였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9단선은 해양법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에 항행의 자유라는 논리와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논리가 관습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⁸⁸⁾ 이에 2016년 미국 카터 국방장관은 연례 국제안보회의에서 산호초 매립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제 3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5년 10월부터 중국이 건설하는 인공섬 주변의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이었고, 2016년 10월까지 4회의 작전을 수행했다. 또한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⁸⁹⁾

86)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6), pp.72-75.

87) 배병화,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동북아 지역안보”, 「한국군사학논집」 제 75집 (3)호(2019), p.9. 재인용

88) 김화진, “남중국해 분쟁의 현황과 아시아의 국제질서”, 「서울국제법연구」 제 23집 (2)호 (2016), p.4. 재인용

89)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7), pp.73-76.

3. 러시아

탈냉전기 이후 러시아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이는 미·러 전략적 상호작용의 약화에서 기인했는데 푸틴 대통령 2기 이후에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회복하지 못하던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남북한 동시 영향력을 갖추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 전략적 행위자로 나서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미국과의 전략문제에 있어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도록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가로서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처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동맹의 연루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고 그렇기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도 성장으로 인한 동북아와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러시아로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미·중 양극구도에서 미·중·러 삼극 구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를 시작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동북아 주요 6개국이 모두 정권이 교체되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 중·일간의 영토분쟁이 있었다. 여기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을 통해 동북아 정세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⁹⁰⁾

유럽에서는 미·러간, 러·NATO간 MD구축문제로 불씨가 남아있었지만 NATO와의 협력을 통해 반러시아적 MD구축이 아닌 러시아 참여하 MD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⁹¹⁾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는 서방이 뱅가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상정하였다. 러시아는 최초 반대했지만 이후 기권하여 사실상 서방에 양보를 하였다. 이렇게 유화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서방과의 협력모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10년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체결과 2012년 러시아의 WTO가입은 이러한 협력모드에 긍정적이었으나 공동미사일방어체제 합의에 실패하고 미국의 유럽 MD배치와 NATO의 확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카다피 제거에 사용된 점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러시아는 리비아에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독단적 무력행사로 나왔다는 점에

90) 신범식,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 29집 (1)호(2013), pp.124-126.

91) 신범식, 앞의 논문, pp.131-132. 재인용

37 배신감을 느꼈다.⁹²⁾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하자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조직에 대한 자산 동결조치를 내렸다.⁹³⁾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여론을 통한 비판을 부드러운 봉쇄(soft containment)라고 봤으며 자신들이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겼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NATO 가입, EU에의 통합, 미국과의 동맹(혹은 연합)을 고려했지만 이는 실패하였다.⁹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전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방에서도 상호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피하자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러시아 또한 서방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향후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적극적 관계개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⁹⁵⁾

푸틴 대통령은 스스로를 국가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KGB요원으로서의 경력이 영향을 미쳤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은 국가를 재건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⁹⁶⁾ 이러한 국가주의 노선으로의 선택은 크게 국가권력의 확대, 민족주의의 고조, 군사력 증강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국가권력의 확대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확대하고 지방권력과 시민사회, 언론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의는 권력의 권위주의형 모습으로 푸틴주의(Putinism)라고도 한다. 이는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⁹⁷⁾ 러시아는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신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였다. 구 조문에 비해 군사·안보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방어적 군사력 사용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공격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해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은 테러리즘과 국제적 중요분쟁 해결을 위한 파병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⁹⁸⁾ 2016년 4월에는 국가근위대(National Guard)를 창설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였다.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주권민주주의를 내세웠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러시아를 개방하지만 타국에 의한 간섭은 거부하는 것

92) 이홍섭,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대외정책”, 『중소연구』 제 43집 (3)호(2019), p.159.

93) 김재환·박영택, 『동북아안보복합체와 한반도 안보』,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19), p.140.

94) 이홍섭,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대외정책”, 『중소연구』 제 43집 (3)호(2019), pp.157-158.

95)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7), p.108.

96) 이홍섭,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대외정책”, 『중소연구』 제43집 (3)호(2019), p.162. 재인용

97) 이홍섭, 위의 논문, p.165. 재인용

98)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7), p.106.

38로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러시아식 민주주의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두 번째로 민족주의는 러시아 러시아의 위대한 과거를 상기하고 재부흥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러시아인들에게는 단합의 계기가 되었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세 번째로 군사력 증강부분에서는 6,500억 달러를 들여 “국가무장계획 2020” 추진에 있다. 이는 2011년에 발표하였는데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2015년까지 30%, 2020년까지 70%를 목표하였다. 하지만 2015년 목표의 조기달성으로 2017년 새로 국가무장계획 2025를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2018년부터는 8년간 17조 루블을 투자하여 크림반도 사태 이후 미국과의 전략적 충돌에 대비하여 지상군과 특수전 전력의 강화 의도를 보였다.⁹⁹⁾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THAAD)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MD에 참여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의 MD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 역지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해석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는 국가 공식문건에서도 러시아 안보의 최대 위협은 NATO 확장과 미국의 MD정책이라고 밝혔다.¹⁰⁰⁾ 러시아에서는 MD의 최종 목적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가 아닌 러시아를 선제 타격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타격시스템이 MD가 완성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¹⁰¹⁾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이는 푸틴의 지지층이 두텁다는 사실과 함께 서방과의 갈등이 러시아인들의 애국주의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 전 연설에서 집권 4기 동안인 2024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위의 GDP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서방의 MD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 ICBM과 핵 추진 순항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이는 집권 4기에는 경제와 군사력 강국으로서의 러시아를 이룩하겠다는 의지이다.¹⁰²⁾ 러시아

99) 이홍섭,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대외정책”, 『중소연구』 제 43집 (3)호(2019), pp.165-170. 재인용

100)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7), p.109. 재인용

101) 한국국방연구원, 위의 책, p.116. 재인용

39) 아시아 중시정책과 극동개발을 통한 한·중·일의 관심을 끌면서 미중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유럽 일원과 중동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잭슨주의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부분적 통제로 러시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러·중 관계는 푸틴 대통령 집권 4기에 역사상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8년 6월 상하이 협력기구 참석과 중국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적으로 러·중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였고 이는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4자회담에서 소외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 실패로 보고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통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미일동맹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⁰³⁾

4. 일본

1968년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주일미군의 역할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막는 존재로서 마치 “탄산음료를 막는 병뚜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1996년 미·일 안보 공동선언과 1997년 신방위협력지침, 1999년 일본 내에서의 법제의 제정, 2004/2010년 일본 방위계획대강의 수정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의 역할 확대에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의 약화로 인한 힘의 공백을 일본의 힘으로써 보완하고자 의도해왔기 때문이다.¹⁰⁴⁾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겪으며 국방예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패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내세운 전략은 일본·호주·인도를 축으로 동맹 네트워크 강화하고 이를 통해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유지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102) 서동주·이상준, “푸틴 집권과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 경험의 과제”, 「러시아 연구」 제 28집 (2)호(2018), pp.116-117. 재인용

103) 서동주·이상준, 앞의 논문, pp.118-124.

104) 김종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황해문화」 제 76호(2012), pp.209-210.

40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북방삼각체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일본 자체적으로도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협소한 영토에 많은 인구와 고도화된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일본의 특성상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¹⁰⁵⁾

2012년 12월 일본의 총리대신으로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고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는 “강한 일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발표한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의하면 평화 수혜자로서의 일본이 아닌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 창출자로서 강한 일본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격적 행보를 위협으로 판단하였고, 아베 내각은 이를 독자적 방위력과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자 했다.¹⁰⁶⁾

이후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미일동맹을 구상하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미·일 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고 평화안전 법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일본은 2015년 무력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표적으로 새로 도입된 존립위기사태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안보법제는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응방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법률이 연관되어 있고 사태대처법, 자위대법 등 “사태대처법제”로 불리고 있다. 이 사태대처 법제를 개정하면서 일본은 무력사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새로운 법제에서는 “존립위기사태”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존립위기사태로 규정될 때에는 국제적 민감 사항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존립위기사태의 대처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공역과 공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위대법에서는 자위대의 임무를 규정하는 “일본 주변지역에서”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¹⁰⁷⁾

105) 김종대, 위의 논문, pp.210-211.

106) 김두승,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23집 (2017), p.4.

107)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표 3-3] 일본 안보법제의 각종 사태와 내용

	사태	정의	대응
기존	무력공격사태 (무력공격사태법)	외부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 또는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긴박한 사태	개별적 자위권 행사
	무력공격예측사태 (무력공격사태법)	사태가 기박해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사태	
신설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뿌리째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요 영향사태 (주변사태법 개정)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	미군 혹은 타 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국제평화 공동대처사태 (국제평화지원법 신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	

*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서울 : KIDA Press, 2016), p.83. 재인용

일본의 사태법제에서만 보더라도 자위대의 해외 파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넓어졌다. 기존의 일본은 자국에 대한 상대의 무력공격 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었지만 “존립위기사태”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행위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위기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존립위기사태의 정의에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등의 표현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방어적 수단의 성격이었던 자위대를 공격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이는 일본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안보법제의 중의원 통과 전 자민당 중의원회에서 “전쟁을 미연에

평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자위대를 국제평화 지원활동에 수시파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새로 도입한 중요영향사태는 기존의 “주변사태”를 확장한 개념으로 “일본주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자위대가 전 세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과거에는 미국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현재는 타국군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금지하던 탄약 공급, 전투기 급유 등의 전투지원임무까지 가능하게 되었다.¹⁰⁸⁾ 이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존립위기사태처럼 자위대의 전 세계적 활동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실시된다는 의미이다. 2015년 미국과 일본은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협조 폭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의 공동 대응과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따라 아시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군사력인 일본의 힘을 증강시켜주고 일본은 그 기조에 맞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5년 국방백서에는 기존의 제 1위협이라 여겼던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을 중국에 투사함으로써 인해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보통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여건조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¹⁰⁹⁾

제 2 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1.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최초 흑인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아시아가 정치·경제적 중심지가 될 것이고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Asia Pivot/Rebalance)을 펼쳤다. 이는 곧 아태지역의 패권국인 미국이 지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통해 관여하고자 했다.¹¹⁰⁾ 조

108)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6), pp.85-87.

109) 한국국방연구원, 위의 책, pp.82-92.

차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미국은 중동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아시아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중국이 성장하여 팽창정책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했다. 2011년 미국의 게이트 전 국방장관은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전진배치를 강조했고 이 연설에서 추론한 아태지역의 전략핵심은 동맹관계의 심화, 중국의 부상에 대처,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 아태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된다.¹¹¹⁾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두 번째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권 후반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이는 2010년 발표한 첫 번째 국가안보전략과 비교했을 때 2010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내부에서 축적한 힘으로 국제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고 설득과 협상, 국제협조를 통한 개입을 중요시했지만 2015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강화된 미국의 위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리더십의 회복과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바라지만 해양·사이버 안보와 영토분쟁 등 무력행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와 전략적이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발칸반도와 동유럽 국가의 유럽 통합을 지원할 것이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강한 제재를 통해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중동지역의 ISIL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걸프국가들의 억지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지역/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이를 제거할 것이며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¹¹²⁾

미국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매년 10% 이상 국방비를 늘려오는 추세였으며 G2시대에 어울리는 대양해군으로 항공모함과 대함미사일 등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를 추진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제해권 경쟁의 심화를 불러 일으켰고 기존

110) 신성호,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중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KRIS 창립 기념논문집」(2017), pp.106-107.

111)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제 16집(2)호(2011), pp.110-111.

112)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서울 : KIDA Press, 2016), pp.26-27.

44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했다.¹¹³⁾

오바마 행정부 후기의 군사/안보전략은 대반란전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전방위 전투에 대비한 군사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미국이 직면한 전략 환경이 변화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요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늦어 상대적 쇠퇴가 발생하였고 둘째, 기후변화나 종교적 극단주의 질병 등은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이 독점적으로 우위를 점령하고 있던 스텔스, 정밀유도무기 등의 신기술이 이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상대적 우세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리(proxy)국가를 활용한 현상변경과 이란의 핵·미사일기술 개발, 북한의 사이버 위협, 중국의 아시아 질서를 무시한 팽창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전략으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비국가행위자, 비국가적 정체성을 가진 군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혼합된 행위자 등 국가간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핵능력과 전방배치, 순환배치, 대응능력 과시, 일방주의적 군사력 사용도 언급하고 있다. 신 동맹전략은 핵심지역(key locations)에서 미군의 전진배치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 및 새 군사협력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¹¹⁴⁾

2.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국 제일주의(American First)를 주장하며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추구(Advancing America's core national interest)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113)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제 16집 (2)호(2011), pp.122-125.

114)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6), pp.46-48. 재인용

책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¹¹⁵⁾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National Security”에 대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지키기 위해 역지력을 재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다.¹¹⁶⁾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주장하였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말한 힘을 통한 평화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국방력 감축을 다시 군비강화로 전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강화에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가 대외안보정책과 대외경제정책 모두를 관통하고 있으며 안보와 경제의 회복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군사력 재강화 정책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였다.¹¹⁷⁾

트럼프 리더십의 특징으로는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2019년 9월 유엔에서 사회주의는 지배층의 권력만을 위하고 국가와 사회를 파괴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좌파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국가와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 초국가적이고 비국가행위자인 테러단체라는 3대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중국에 대해서 주변 동맹국에게 사회주의 국가는 위협이기 때문에 위협 제거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였고 201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¹⁸⁾

115) 신성호,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KRIS 창립 기념논문집」 (2017), pp.112-113.

116) <http://www.whitehouse.gov/issues/national-security-defense/> , 백악관 홈페이지 “National Security” 게시물 (검색일:2020.11.25.)

117)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 20집 (1)호 (2017), pp.84-86.

118) 윤형호, “박정희-카터와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딜레마: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한국동북아논총」 제 25집 (1)호(2020), pp.41-42.

제 3 절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의 對중국 전략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며 동북아에 대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일동맹의 지속과 중국에 대한 깊은 관여(deep engagement), 그리고 북한 고위급과의 대화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실패에 가까웠다. 미국이 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관여하려는 정책은 미·중·일 삼각관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위치에 서기 위함이었다. 앞서 말한 미국의 세 가지 목표가 실패에 가까워지자 오히려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이라고 표현하며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린치핀이란 표현은 미국이 주로 미일동맹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었지만 그만큼 당시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방향과 부합하는 핵심적 요소였다.¹¹⁹⁾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2011년 외무-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이 오키나와 근해에서의 함정의 활동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상호 안보동맹을 강화한다는 미일 공통전략목표도 포함시켰다.¹²⁰⁾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동맹정책은 동맹을 지리적·내용적으로 포괄화하고 전략화하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되 전방위 견제 메커니즘을 확충하는 데 노력했다.¹²¹⁾

2015년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중 대한민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기존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베트남 등의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ASEAN, APEC 등 지역안보기구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주도의 질서유지를 강조하지만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이러한 과업을 미국이 단독으로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동맹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 간의 협력을 추구했으

119) Victor D. Cha, "The U.S. and Asia in 2011", 「전략연구」(2011), pp.32-33.

120)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제 16집 (2)호(2011), p.113. 재인용

121) 김성한, 위의 논문, p.111.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점차 떠오르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¹²²⁾ 또한 2016년 상그릴라 대화에서 카터(Ash Carter) 국방장관이 신동맹전략을 개념화하여 “원칙에 입각한 안보 네트워크(Principled Security Network)를 언급하였다. 이는 전방 배치된 해외 주둔 미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동맹 체제를 활용하며 새로운 협력국과 함께 NATO와 유사한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미동맹은 부차적 동맹으로 언급하며 호주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위치가 상승하고 인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¹²³⁾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 쇠퇴를 방지하고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여 10억 달러의 운용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국제안보의 공공재를 패권국이 감당하지 않고 동맹국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현상유지를 취하는 것이다.¹²⁴⁾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략에 있어서 동맹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태평양 사령부(Pacific Command)를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변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아시아에서의 중거리미사일(1,000~5,500km)의 배치를 선언하였다. 이에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에게 단거리 핵미사일 배치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선택적 개입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¹²⁵⁾

122)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6), pp.27-30.

123)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2017), pp.46-48.

124)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 20집 (1)호 (2017), pp.86-95.

125) 윤형호, “박정희-카터와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딜레마: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한국동북아논총」 제 25집 (1)호(2020), p.42. 재인용

제 4 절 소결론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2010년대의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그간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몽(中國夢)을 표방하며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점차 확대해가는 중국의 모습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봉쇄정책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하였다.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미·중의 대립을 중재해줄 수 있는 권위체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은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 지역으로의 해양력 강화 등의 공격적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합리적 비용과 편익의 계산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선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는 것이다. 이는 미·중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10년대 미·중의 갈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과 일치한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에서는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패권을 추구한 뒤 세력균형을 통해 현상유지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현상유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에서 군림하기 위해 중국의 성장을 봉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패권은 전 세계의 패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패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투영하고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지리적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다.¹²⁶⁾ 미국과 같은 지배적 세력은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지만 현상유지에 불만족을 느끼는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중간의 관계를 세력전이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의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미국에 대항할 힘이 갖춰지게 된다면 현상에 불만을 가진 국가인 중국은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126) John J. Mearsheimer,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105, No.69(2006), p.160.

한국의 힘으로는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응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고, 미국 또한 북방삼각체 국가들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활용한 남방삼각체 국가를 결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방삼각체 국가들은 국가이익의 방향이 미국의 현상을 타파하는 것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점차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방삼각체 국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고해진 미일동맹과 한일동맹 그리고 적대적 관계인 한·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3-4]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2018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국방비(달러)	7,170 억	460 억	1,505 억	456 억
병력(명)	약 1,348,000	약 247,000	약 2,035,000	약 900,000
전투(폭)기	2,184 대	332 대	1,999 대	1,220 대
항공모함	11 척	47 척	1 척	1 척
잠수함	68 척	19 척	62 척	62 척

*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3. 도표 1-1 재인용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영토적 문제 등 오래된 상호간의 불신으로 인해 서로 경쟁하며 대립해왔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던 시절에는 일본이 추구한 동북아 현상유지에는 한국이 불만족을 느껴왔지만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남방삼각체 국가를 이끌게 된 이후에는 한·일 모두 이러한 미국의 현상유지에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팽창, 러시아의 군사강국으로의 성장 등 안보목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일의 유사동맹 관계는 협력을 통한 안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관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영토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의 내부에서 미국 주도의 對북방삼각체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한·일 간의 불신과 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딜레마(dilemma)가 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의 불신은 결과적으로 동맹의 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동맹의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주

뿐만 아니라 한·일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안보위협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알아본 동북아 정세와 주요 국가들의 위협인식은 북한의 경우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핵무장의 억제와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의 유일한 돌파구인 중국과 러시아의 원조 단절을 위협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든 북·중·러 북방삼각체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여 북한과 미국의 대결구도가 아닌 북방삼각체 국가들과 남방삼각체 국가들의 대결구도로 만들고자 의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하여 동북아의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 주도권이 곧 동북아의 주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의 질서를 중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재편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지속적인 중국군의 현대화와 개편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한·미·일 동맹의 팽창과 역내 영향력의 감소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역내 제반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미·중 대결구도를 미·러·중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미 견제전략을 수행했다.

[표 3-5] 동북아 주요 6개국의 위협인식과 안보전략

국가	위협인식	안보전략
북한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한 핵무장 억제	북·중·러 연대를 통한 한·미·일 동맹에 대응
	중·러의 대북지원 약화	
중국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 상실 가능성	중국 주도로 동아시아 재편
	역내 영향력 유지 어려움	중국군 현대화 및 전력 강화를 위한 개편
러시아	역내 제반 문제에서 역할 감소	북·중·러 동맹 강화 및 활용
	한·미·일 동맹의 팽창으로 인한 위기의식	중·러 동맹을 통한 대미 견제 한반도 영향력 강화 추구
한국	북한의 핵무장 등 불량국가의 준동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주변 4국간 패권경쟁에 의한 안보 불안정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북·중·러 삼각동맹의 결속에 따른 군사적 불안정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미국	중·러의 영향력 확대	역내 영향력 유지, 중·러의 도전 차단
	북핵문제의 지역문제화 및 북·중·러 연합 조짐	동맹국과의 관계 및 다방면의 협력 강화
	역내 국가의 군사력 확대 및 갈등 지속	북한의 핵무장 차단, 한미동맹 강화
일본	중국의 부상과 군사적 위협	자위대 전력 증강 및 활동 강화
	북핵위기 점증	북핵대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한반도 내 군사적 갈등 상존	사이버전 강화 및 전략무기 증강

* 출처 : 김재환·박영택, 『동북아안보복합체와 한반도 안보』,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19), pp.81-166. 표 Ⅲ-2, Ⅲ-5, Ⅲ-10, Ⅳ-2, Ⅳ-5, Ⅳ-11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가장 약소국이다. 한반도 주변국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중의 패권경쟁도 서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미·일 동맹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을 비롯한 북·중·러 동맹의 결속으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불안정 상태이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안보

외 측면에서는 중국의 부상은 북·중·러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 안보에도 위협요인이다.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요소인 한미동맹 또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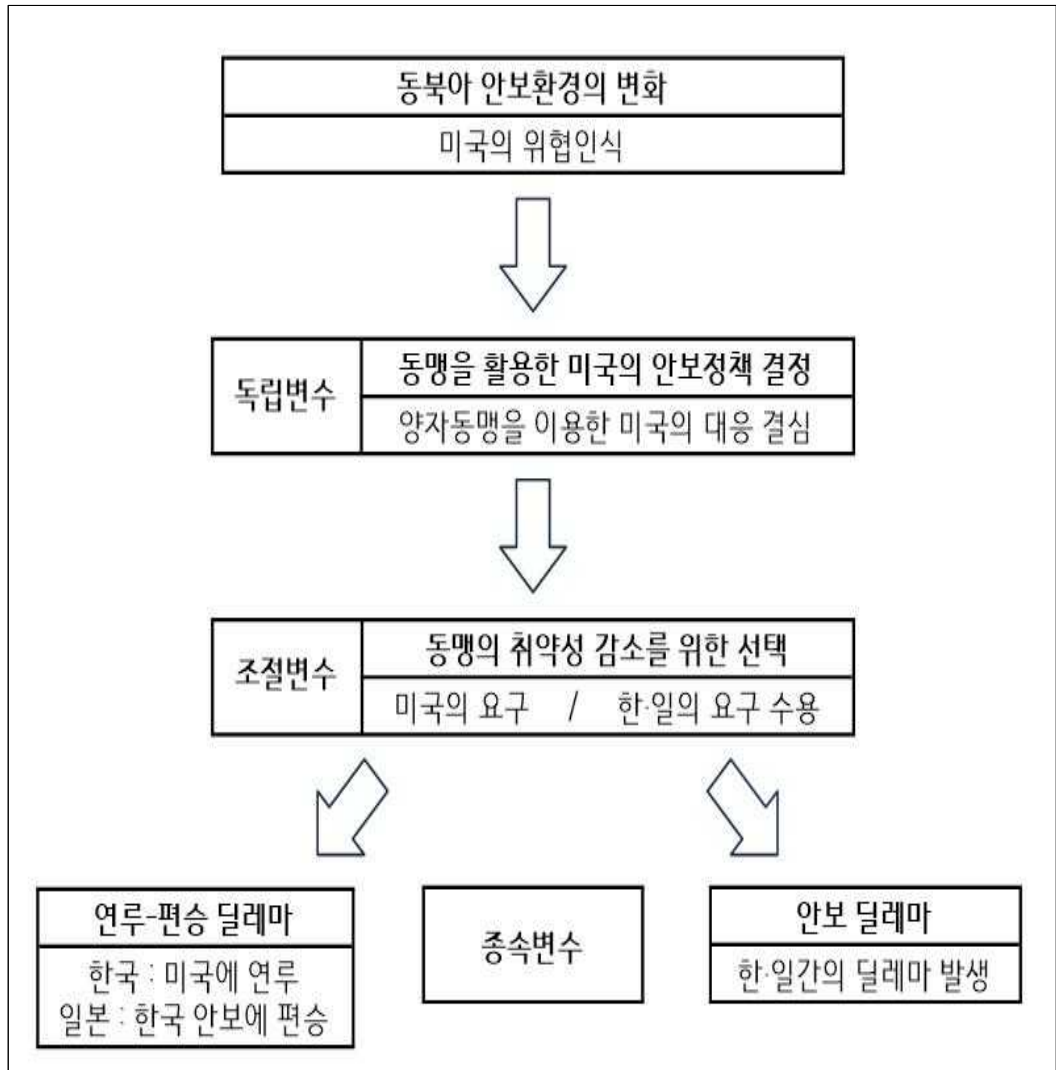
제 5 절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의 미·중간의 갈등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한·일 두 국가가 공동의 이념적·안보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남방삼각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립적 관계로 가는 이유가 한·일간의 딜레마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미국은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 중시정책을 펼치며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안보위협이 있었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후 국방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은 직접 개입보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활용한 동북아 안보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안보정책은 한국을 이용하느냐 일본을 이용하느냐를 양자택일하게 했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정책을 선택하느냐 한·일이 이러한 기조에 맞는 정책을 요구하여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일간에 딜레마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한·일 간의 딜레마로 인해 두 국가의 관계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더불어 한·일의 관계적 문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 중 한 가지를 통해 단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대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주의 이론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유사동맹 관계인 한·일 두 국가는 동일한 안보상의 적을 상정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동일한 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문제와 영토 문제등의 전통적 이유와 이러한 관계적 문제에 따른 한·일 간의 딜레마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국가 간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현실주의 관점의

월충적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한·일간의 딜레마 발생 모형



* 출처 : 스나이더(Snyder)의 방기-연루 딜레마와 허츠(John Herz)의 안보딜레마를 인용하여 연구자가 정리

제 4 장 유사동맹 간의 안보 딜레마

제 1 절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1. 배경 및 경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ABM 제한협정을 파기하면서 2002년부터 MD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동북아에서의 MD 형성은 한국의 사드(THAAD)배치가 최초는 아니었다. 2006년 일본이 X밴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서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MD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비한 한반도 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체제 편입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했다고 판단하게 하였다.¹²⁷⁾ 이러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으로 한국 방문 간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5년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또한 한국에서 열린 차관보급 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¹²⁸⁾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결국 2016년 7월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오바마 정부 초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이유로 체코와 폴란드에 MD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5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MD 구축의 명분을 잃게 되고 러시아는 이란의 위협은 없어졌지만 MD 체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비난하였고, 이는 한국의 사드배치에서도 같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가 레이더로 인해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기 식

127) 현대경제연구원,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이슈리포트』 제 2017-4호 (2017), pp.2-3.

128) 박휘락(2016) “사드배치 문제의 군사전략적 함의” 『통일전략』 16(4) 한국통일전략학회 pp.87-88. 재인용

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공에 대한 감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¹²⁹⁾ 또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결국 미군이 운용하는 미군의 자산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밝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의 목적뿐만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한국에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미사일의 궤도는 사실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고 2차 공격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¹³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한창 논의될 때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춰 반대를 내세우며 북·중, 북·러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일본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 중국 견제차원의 한국의 사드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드를 통한 인해 안보 편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¹³¹⁾

[표 4-1] 사드(THAAD) 제원 및 특성

개발사	록히드 마틴	지름	0.34 m
개발년도	1987년	작전반경	200 km
생산년도	2008년 ~ 현재	최고속도	마하 8.2 (2.8km/sec)
가격	미화 \$ 757,000,000	비행고도	150 km
중량	900 kg (발사중량)	최대고도	150 km
길이	6.17 m	추진체	1단식 고체로켓

* 출처 : 위키피디아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93%9C>
(검색일 : 2020.10.22.)

2. 안보적 의의 및 한·일간 발생한 딜레마

동북아 신(新) 냉전 구축은 사드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동북아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그 연장선이다.¹³²⁾ 하지만 이러한 사드배치에 대한

129) 김인성, “한국의 사드배치와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제 67호(2016), pp.79-83. 재인용

130) 김인성, 위의 논문, p.84. 재인용

131) 현대경제연구원,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이슈리포트」 제 2017-4호 (2017), pp.2-3.

한·미·일 3국이 공유했지만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은 한국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부터 문화, 여행, 식품, 위생,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실행했다.¹³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는 한국이 자발적인 방어적 필요성보다는 미국의 의도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동북아에서의 MD 시스템을 추진하려는 의도였고, 이를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하여 추진한 것이다.¹³³⁾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중·러의 ICBM으로부터 미·일을 보호해주는 전초기지로 전략하였다는 우려도 표명했다.¹³⁴⁾

이를 한·일 딜레마 발생 모형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향상으로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ICBM 능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택으로 비교적 중국과 가까이 있는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드 배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의도한 MD 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¹³⁵⁾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의 ICBM 능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당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 모두를 무력화 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 중국은 50여 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500여 기의 요격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어도 10%의 요격 효과를 가정한다면

132)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창작과비평」 제 43집 (3)호(2015), p.565.

133)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5집 (2)호(2017),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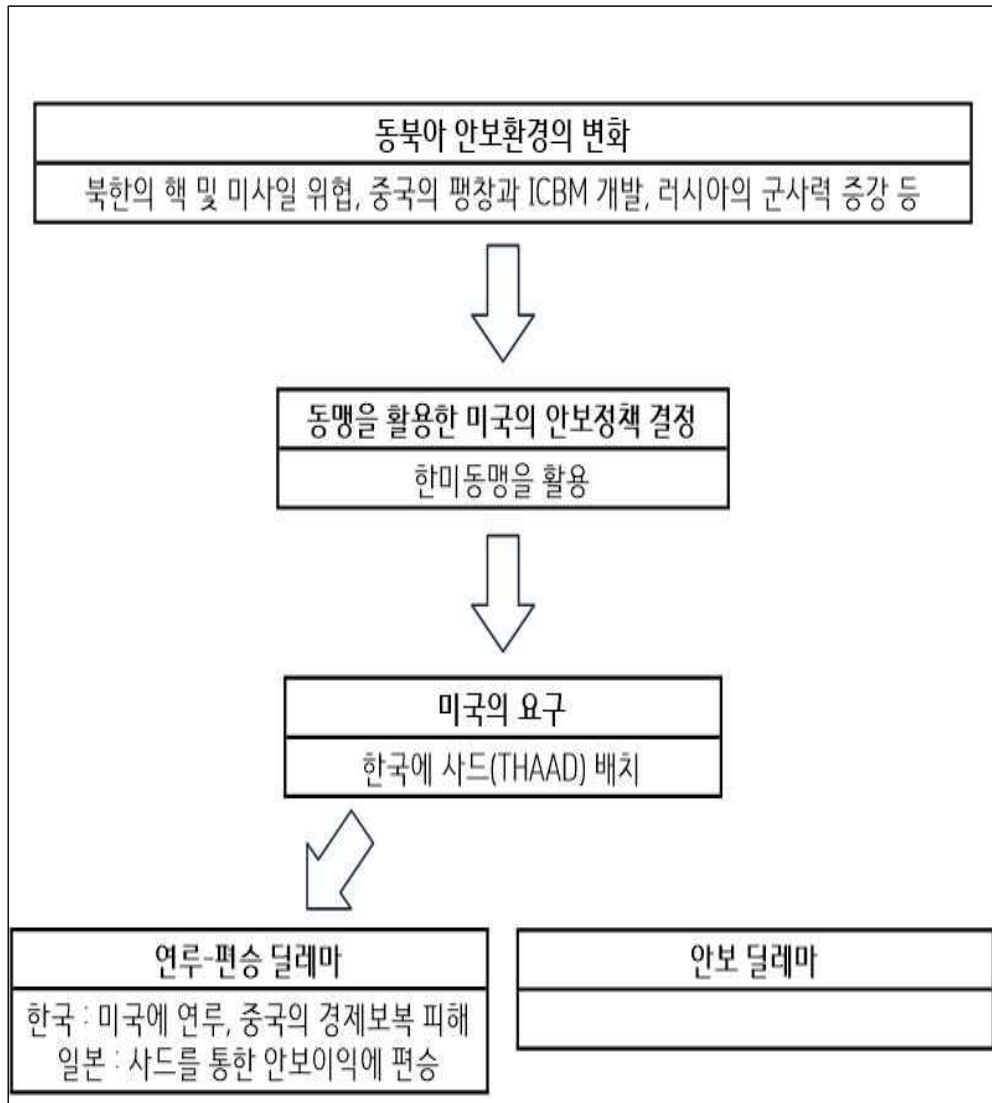
134) 모준영,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제 67호(2016), p.34.

135)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창작과비평」 제 43집 (3)호(2015), p.563.

136) 고영대, 위의 논문, p.562.

57는 모두 무력화가 가능한 숫자였던 것이다.¹³⁷⁾ 이렇게 배치한 사드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연루의 딜레마를 발생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림 4-1] 한국의 THAAD 배치와 한·일의 딜레마 발생 모형



* 출처 : 스나이더(Snyder)의 방기-연루 딜레마와 허츠(John Herz)의 안보딜레마를 인용하여 연구자가 정리

137) 고영대, 앞의 논문, p.562. 재인용

제 2 절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1. 배경 및 경과

1968년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주일미군의 역할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막는 존재로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1996년 미·일 안보 공동선언과 1997년 신 방위협력지침, 1999년 일본 내에서의 법제의 제정, 2004/2010년 일본 방위계획대강의 수정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의 역할 확대에 꾸준히 노력해왔다.¹³⁸⁾ 2004/2010년 방위대강의 내용으로는 글로벌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국을 의식해 각종 사태에 대한 실효적 억제 및 대처가 가능하고 능동적 작전수행이 가능한 “동적 방위력”을 주장했다.¹³⁹⁾ 이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패권이 약화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었고 이는 힘의 공백을 일본의 힘으로써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동에서의 전쟁을 통해 국방예산을 감축을 결정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본·호주·인도를 축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여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여기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남방삼각체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⁴⁰⁾ 2010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과의 충돌 후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국유화조치는 중국의 대일압박 정책을 펼치게 했고, 중국이 희토류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을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생각하던 일본은 중국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¹⁴¹⁾ 이것이 일본 자체적으로도 군사력 강화를 희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게 된 것이다.

138) 김중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황해문화」 제 76호(2012), pp.209-210.

139) 배병화,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동북아 지역안보”, 「한국군사학논집」 제 75집(3)호(2019), p.13. 재인용

140) 김중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황해문화」 제 76호(2012), pp.209-211.

141) 김성걸·김두승, “세력균형 변동과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구상”, 「군사논단」 제 78호(2014), p.60.

592. 안보의의 및 한·일간 발생한 딜레마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은 단순히 보면 일본의 국익을 위한 야욕이라는 행위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자신의 국익과 동맹이 처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강한 일본이 곧 미국의 국익이고 미국의 국익은 곧 일본의 이익¹⁴²⁾이라는 윈윈전략을 내세우며 동맹의 취약성 감소와 자국의 취약성 감소라는 동시이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한반도 통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과¹⁴³⁾ 일본의 군사력은 곧 한반도 정벌이라는 한국에게 위협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¹⁴⁴⁾이 있지만 이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한·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활동영역을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투행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¹⁴⁵⁾

이를 한·일 딜레마 발생 모형에서 분석해보면 미국은 과거 일본의 재무장에 대비하여 동맹을 활용하였지만 국방예산의 삭감과 팽창하는 중국의 남태평양, 서태평양 일대의 진출을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은 이를 동맹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면서 해군력 위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활용하여 견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 명분을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일치하면서 미국에게 자신들의 제약인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헌법 개정은 자위대의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하여금 미래 위협으로 판단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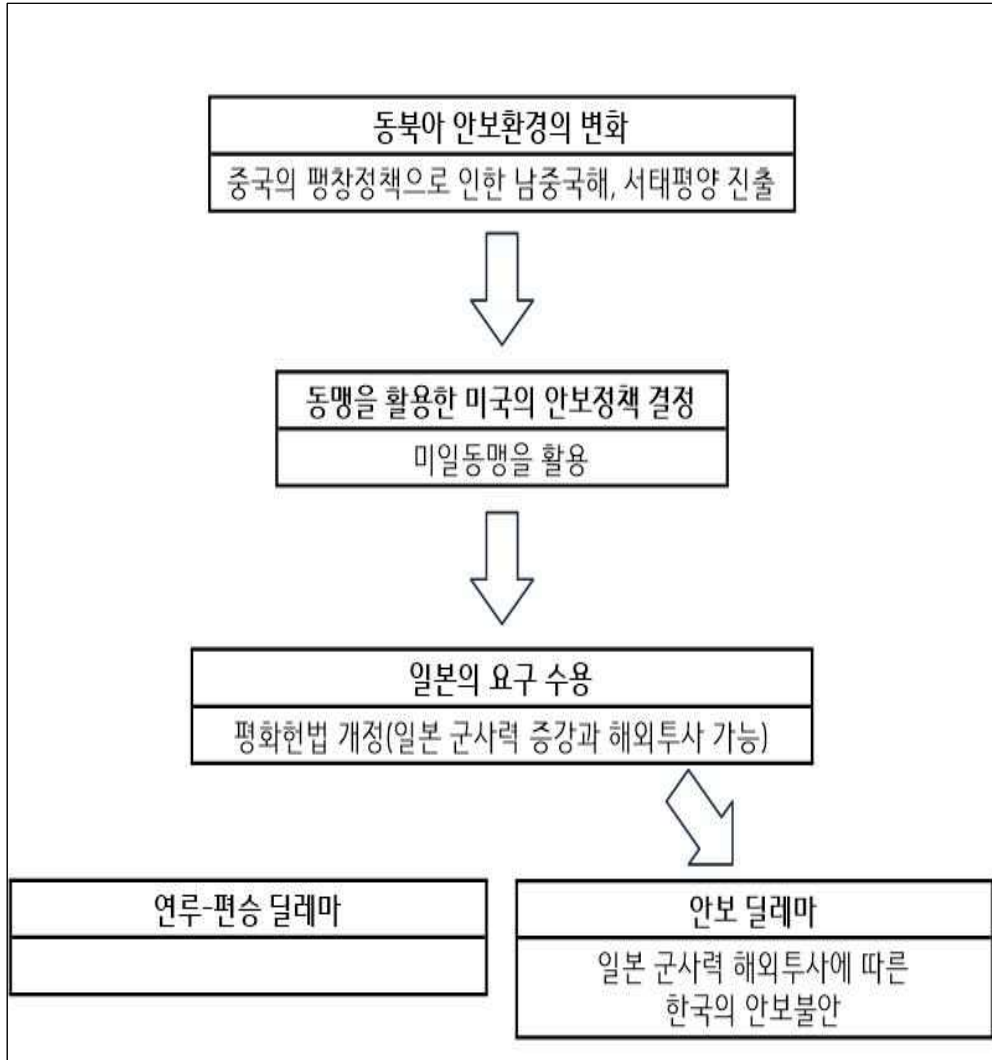
142) 김성걸·김두승, 앞의 논문, p.64.

143) 김종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황해문화』 제 76호(2012), p.216.

144) 김종대, 위의 논문, pp.217.

145) 김두승,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23집(2017), p.16.

602림 4-2]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한·일의 딜레마 발생 모형



* 출처 : 스나이더(Snyder)의 방기-연루 딜레마와 허츠(John Herz)의 안보딜레마를 인용하여 연구자가 정리

제 3 절 한국의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 개정

1. 배경 및 경과

박정희 정부시절 한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북한의 위협이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로 인해 안보 공백을 해결할 군사력 강화수단이 필요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나이키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량하여 백곰 미사일을 개발해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알아채고는 반발하였다.¹⁴⁶⁾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위킴(John Adams Wickham, Jr.)은 한국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노재천 국방부장관이 답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서한은 국제법상 효력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이다.¹⁴⁷⁾

양해각서 형태가 아닌 형태로서는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다. 김영삼 정부부터 협정을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의 미사일 개발제한을 상향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것이 1차 미사일 지침 개정이며 이 때 미국 이외 국가와 한국의 기술협력이 가능하게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는 것에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성과도 얻었다.¹⁴⁸⁾

2차 미사일 지침 개정은 2012년에 이루어졌다. 북한이 3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미사일을 통해 억지전략을 추구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¹⁴⁹⁾ 북한의 노동미사일,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등에 비하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상대적으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거리를 800km, 탄두중량을 1,000kg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146) 김지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국가전략」 제 24집 (4)호 (2018), p.103.

147) 김지일, 위의 논문, p.107. 재인용

148) 김지일, “한국의 자주국방과 미사일 개발”, 「전략연구」 제 23집 (3)호(2016), p.215.

149) 김지일, “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p.157. 재인용

였 같았지만 협상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위협을 주게 되어 반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¹⁵⁰⁾ 이후 북한이 4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한·미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미 상원의원 국사위원장인 칼 레빈(Carl M. Levin)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2차 미사일 지침 개정은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고 탄두중량은 500kg 그대로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¹⁵¹⁾

3차 개정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ICBM 능력의 완성이 사실화되며 사거리 800km를 유지하되 미사일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제한 탄두중량을 가용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황이 호전되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완화되는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⁵²⁾

4차 개정은 3년 뒤인 2020년, 사거리 800km 유지, 탄두중량의 무제한, 민간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해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¹⁵³⁾ 그 동안 미국의 입장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하였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민간용 로켓에 한정한다는 한국의 설득에 공감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¹⁵⁴⁾

150) 김지일, 앞의 논문, pp.158-162. 재인용

151) 김지일, 위의 논문, pp.164-166. 재인용

152) 김지일,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전략연구」 제 26집 (1)호(2019), p.166.

153) <https://blog.naver.com/thebluehousekr/222044574359>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블로그 “청와대이야기” 게시판(검색일 : 2020.12.12.)

154) “[단독]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조선일보』, 2020년 1월 29일

[표 4-2]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 경과

	사거리 제한	탄두중량 제한	비 고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1979)	180 km	500 kg	
1차 개정(2001)	300 km	500 kg (동일)	
2차 개정(2012)	800 km	500 kg (동일)	
3차 개정(2017)	800 km (동일)	무제한	
4차 개정(2020)	800 km (동일)	무제한	고체연료 사용가능

[그림 4-3] 한국이 개발 보유 중인 미사일 현황



* 출처 : “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동아일보』, 2020년 7월 29일

2. 안보적 의의 및 한·일간 발생한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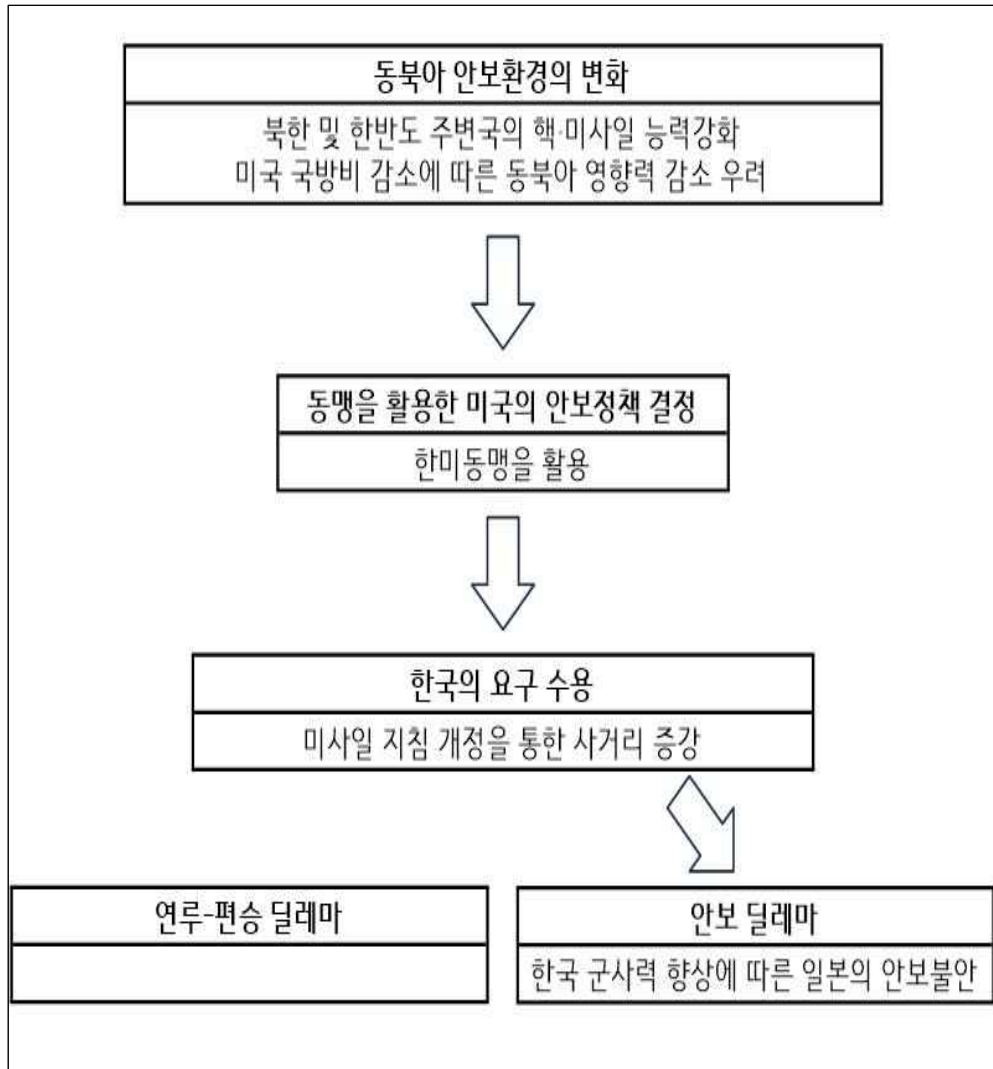
미사일 지침 개정은 안보-자주성 교환(security-autonomy tradeoff)을 강대국의 입장을 거슬리지 않게 좋게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차 개정 논의에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 미사일개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마

협을 바꾸고 개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조차 이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대북억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본과 함께 중국 등의 북방삼각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차 개정은 이는 독자적 대북감시 능력의 향상과 ICBM개발에 대한 잠재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안보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미사일 개발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발사체였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 주입과정의 단축과 우수한 추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말한 민간용 발사체 개발가능에 따라 감시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차후 개정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제약을 모두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¹⁵⁵⁾

155) “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동아일보』, 2020년 7월 29일

표 4-4]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한·일의 딜레마 발생 모형



* 출처 : 스나이더(Snyder)의 방기-연루 딜레마와 허츠(John Herz)의 안보딜레마를 인용하여 연구자가 정리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 보다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활용한 정책을 사용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미동맹 혹은 미일동맹을 활용하였는데 두 국가 중 미국의 요구를 받은 국가는 미국에 연루(entrapment) 되어졌고 요구받지 않은 국가는 요구받은 국가에게 편승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스나이더가 주장한 연루-방기 모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국이 방기하는 행태가 되어버리고 한·일이 방기하는 행태를 취하면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일을 방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⁵⁶⁾

반대로 이러한 정책을 미리 예견하고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한·일 스스로 선택하여 제안했을 경우, 자국의 취약성 감소와 동시에 동맹의 취약성 감소로 이어져 동맹과 약소국 모두 안보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일의 요구로 인한 동맹정책은 한 국가의 군사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상호 안보딜레마를 불러 일으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한·미·일 동맹은 북방삼각체 국가들을 공동의 안보위협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한·일 두 국가는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안보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통의 유사동맹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한·일 두 국가는 전통적인 관계문제로 앞서 설명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국가 간에 형성되는 부정적 의의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한·일의 관계를 구성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상호간의 두터운 안보문화 형성과 국가 간의 노력을 통해 감소시키고 한·일의 상호신뢰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적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루-편승 딜레마 발생 시

156)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2017), p.223.

한 국가가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보딜레마 발생 시 한 국가의 군비향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남방삼각체 국가의 공동 안보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해 한·일에게 요구하는 형태가 아닌 한·일의 입장에서 먼저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함과 동시에 자국의 취약성도 감소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의 갈등현상을 미·중의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북·중·러의 북방삼각체와 한·미·일 동맹의 남방삼각체의 갈등으로 확대하여 거시적으로 조망하였으며 한·미·일 동맹의 내부에서 한·일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미·중의 갈등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한 공격적 현실주의와 세력균형론에 무게를 두었으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일한 안보위협을 받는 한·일 두 국가의 유사동맹 관계가 적대적인 이유와 해결방안을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동맹정책에 대해 주로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과 미·중의 갈등 또한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와 세력균형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미·일의 동맹관계를 현실주의적 측면과 구성주의적 측면을 절충하였으며 세력전이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방삼각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주도하여 남방삼각체 국가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활용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의한 조치와 한·일의 요구에 의한 조치에 따라 한·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여기서 한·일이 요구했을 때 한일 서로에게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 스나이더의 방기-연루 딜레마와 허츠의 안보딜레마를 인용하여 독자적 분석의 틀로 입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남방삼각체 국가는 동맹의 취약성을 제거함으로써 북방삼각체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맹의 내부에서 한국은 남방삼각체의

취약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신의 취약성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곧 동맹 내부의 관계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일의 관계를 개선하여 양국의 안보강화를 통해 win-win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동북아 국제체제 속에서 미·중의 대립을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분석하고 동북아 주요국의 정세를 바탕으로 미·중의 대립을 남방삼각체 국가와 북방삼각체 국가 두 동맹세력의 대립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미·일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북·중·러의 동맹의 특성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는 북·중·러 3국의 관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북방·남방삼각체 국가의 대립을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미국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한·미·일의 안보이익이 미국의 안보이익과 일치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미국의 안보이익과 한·미·일 3국의 안보이익에 대해 구분하여 제시하면 동맹 내부에서의 이익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분석의 틀은 한·미·일 3국의 특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했기 때문에 북방삼각체 국가에 대한 분석이나 유럽이나 중동 등의 동맹관계 혹은 NATO와 같은 다자동맹 체제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의 절충 핵심 이론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유럽이나 중동의 동맹이나 다자동맹 관계에서의 동맹의 내부를 조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1. 국내문헌

강주택(2017),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영대(2015),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창작과비평」 제 43집 (3)호

김관옥(2014),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대결의 구성주의적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 17집 (1)호

김관옥(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 20집
(1)호

김광린(2016),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학논총」 제 6집 (1)호

김두승(2017),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23집

김성걸·김두승(2014), “세력균형 변동과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구상”, 「군사논단」 제
78호

김성한(201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
구」 제 16집 (2)호

김열수. (2017),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 법문사

김인성(2016), “한국의 사드배치와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제 67
호

김재환·박영택(2019), 『동북아안보복합체와 한반도 안보』, 서울 : 한누리미디어

김종대(2012),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황해문화」 제 76호

김지일(2019),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
향”, 「전략연구」 제 26집 (1)호

김지일(2018),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국가전략」 제 24
집 (4)호

김지일(2016), “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고
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일(2016), “한국의 자주국방과 미사일 개발”, 「전략연구」 제 23집 (3)호

김화진(2106), “남중국해 분쟁의 현황과 아시아의 국제질서”, 「서울국제법연구」 제

- 나승학(2015),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 76호
- 대한민국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 모준영(2016),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제 67호
- 박재영(2015), 『국제정치 패러다임』, 파주 : 법문사
- 박정원(2012),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법 : 자결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 126집 (3)호
- 박휘락(2016), “사드배치 문제의 군사전략적 함의” 『통일전략』 제 16집 (4)호
- 배병화(2019),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동북아 지역안보”, 「한국군사학논집」 제 75집 (3)호
- 변창구(2013),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중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 (69)호
- 서동주·이상준(2018), “푸틴 집권과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 경험의 과제”, 「러시아 연구」 제 28집 (2)호
- 서정경(2008),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 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세아」 제 15집 (1)호
- 신범식(2013),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 29집 (1)호
- 신성호(2017),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중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KRIS 창립 기념논문집」
- 양기웅(2014), “한일관계와 역사갈등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연구」 제 17집 (2)호
- 양준희(2001),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3)호
- 유현정·주재우(2017),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5집 (2)호
- 윤정희(2013),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는가? : 현실주의 시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형호(2020), “박정희-카터와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딜레마: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한국동북아논총」 제 25집 (1)호
- 이근욱(2009),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 2009

- 71상환(2015), “세계 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 : 세력전이 시각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 18집 (1)호
- 이재현(2019),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진보평론」 제 81호
- 이지원(2015), “중국과 일본간의 영토분쟁 격화원인 연구 : A.F.K. Organski의 세력전이론을 바탕으로 중·일 간 영토분쟁 심화요인 분석”, 「아시아연구」 제 18집 (2)호
- 이춘근(2007),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파주 : 나남출판
- 이흥섭(2019),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대외정책”, 「중소연구」 제 43집 (3)호
- 정재환(2015), “사회적 합리성의 다양성 : 합리성에 대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 「평화연구」 제 23집 (1)호
- 최경준(2108),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 투영된 과거, 블랙박스 처리된 현재, 추정된 미래”, 「국제정치연구」 제 21집 (1)호
- 최성근(2003), “세력전이 이론을 통한 강대국 간의 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기(2019),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우(2008), “국가안보와 존재론적 안보 : 현실주의 안보론과 구성주의 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국방연구원(2016),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 한국국방연구원(2017),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KIDA Press
- 현대경제연구원(2017),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이슈리포트」 제 2017-4호
-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W. Tompson, 이호재·엄태암 옮김(2014), 『국가간의 정치1』, 파주 : 김영사
- Kenneth N. Waltz(2015), 『인간, 국가, 전쟁』, 정성훈 옮김, 파주 : 아카넷
- Victor. D. Cha(2004) 『적대적 제휴』, 서울 : 문학과지성사
- Victor D. Cha(2011), “The U.S. and Asia in 2011”, 「전략연구」 제 18집 (3)호

22 국외문헌

Douglas Lemke(2002), *Great Powers in the Post-Cold War World : A Power Transition Theory Perspective*, Conference papers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enneth N. Waltz(1959), *Man, the State, and War :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John J. Mearsheimer(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105, No.69

3. 기타(언론기사,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등)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블로그, “청와대이야기” 게시판, <https://blog.naver.com/thebluehousekr/222044574359>, (검색일 : 2020.12.12.)

동아일보, “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2020. 7. 29.

백악관 홈페이지, “National Security” 게시물, <http://www.whitehouse.gov/issues/national-security-defense/>, (검색일:2020.11.25.)

연합뉴스, “너무 나간 中 반한정서... 사드보복 중국의 오판과 모순” , 2017. 3. 16.

연합뉴스, “美군용기 대만 날았나... 미국 “아니다” vs 중국 “추적했다”” , 2020. 10. 25.

위키피디아, “사드”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93%9C>, (검색일 : 2020.10.22.)

조선일보, “[단독]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2020. 1. 29.

ABSTRACT

A Study on the Dilemma between quasi alliances according to
U.S. Choic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alliance
-The Case Study of Korea-Japan in 2010's-

Oh, Tae-Jin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e security environment in South Korea is always unstable.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S., which became a hegemon in East Asia, established a U.S.-led ord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of Northeast Asia and kept China in check. Since 2010, China has grown into a G2 country based on high economic growth and has implemented expansionary policies in earnest.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negligent in Asia due to the war in the Middle East, insisted on a "pivot to Asia" and tried to stop China's expansion in earnest. However, after the war in the Middle East, the U.S. was heavily burdened to check China's rise through direct military power in the existing way under its defense spending reduction policy.

In the 2010s, Northeast Asia had four nuclear tests and numerous

74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as well as China's expansionary policy. In addition, Russia, which was afraid of being excluded from Northeast Asian issues, pushed for the strengthening of its military power to have simultaneous influence 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pursued policies to delve into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n order to cope with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Japan also pushed for a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to enable overseas projection of military power by working hard to check China using the U.S.-Japan alliance.

The bigges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n the 2010s was China's expansion of maritime power into the South China Sea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wanted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the U.S.-Japan alliance. This was because Japan was engaged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in the Senkaku island/Diaoyudao and had military forces centered mainly on naval and air forces. The U.S. also utilized the Korea-U.S. alliance, which has strong military strength and geographical proximity to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on issues and other threats to the North Korea problem.

The cooperation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their security threats have prompted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by utilizing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allied in Northeast Asia. Thu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escalated into a conflict between the three socialist and liberal democracies, not just a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implemented a policy to reduce the vulnerability of the South Korea-U.S. and Japan alliance against the threat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these policies exist the way the U.S. demanded Korea and Japan and the way Korea and Japan demanded the U.S. The joint security threat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as the three countri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they had to strengthen their power through mutual cooperation to cope with such a common security threat. However, the two countries considered each other's military buildup as a potential threat, and within the alliance, each other's arms buildup did not lead to security enhancement and felt

rather burdened.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wo cases: a policy promoted by the U.S. asking for something from South Korea and Japan, and a security policy promoted by South Korea and Japan asking for something from the U.S. And it argues the hypothesis that this led to a dilemma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 would like to find out what dilemmas have occurred and how they work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sent these backgrounds, causes and countermeasures.

【Keyword】 Realism, Constructivism, NorthEast Security, The rising of China, Quasi alliance, Security Dilemma, Entrapment–Abandonment Dilemma, THAAD, Peace Constitution, Missile Guideline